Vol. 30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

2019. 7. 29.

▮정책동향

- 농식품부, 10대 유망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 규제자유특구 7곳 지정 및 총 58개 규제특례 허용
- 정부혁신 평가 우수기관 포상 수여식 및 제4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전담 TF 설치
-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동향
- 통일부-시도지사협의회, 한반도 평화·번영 위한 협약문 체결
- '농촌 태양광 상담 콜센터' 구성·운영
- 스마트 팜 연구개발(R&D) 워크숍 개최
-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범위에 곤충 14종 포함 등

▮아젠다발굴

- **[기획] 빅데이터 주요 동향** ❙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출범
-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위험관리
-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노딜 브렉시트가 영국 농식품 분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2019년 가공식품 마케팅 시장 분석
- **언론 동향** ❙ 북한, 쌀 5만 톤 지원 거부

▮통계·조사

- 2018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 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의 특징
- OECD 통계로 보는 한국의 보건의료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

정책동향 농식품부, 10대 유망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7.25.)

❑ 개요

○ [농식품부, 10대 유망산업 육성 추진 발표※, 2019.7.25.] 농업·식품·농촌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거나 향후 유망한 10대 분야를 적극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발표

※ 과제별 구체적인 지원규모 등은 2020년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결정될 예정

▌10대 유망산업 육성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기본 방향	◈ 사회경제적 트렌드에 맞춰 유망산업 및 분야를 적극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 1차 생산 중심 일자리에서 벗어나 농업 연관 산업 전체적인 관점에서 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 – 농업일자리는 청년농 중심으로 지속 확대 추진

4대 추진전략	10대 유망분야	31개 세부과제
농업 혁신 및 청년농업인 육성	① 스마트 농축산업 ② 청년농업인 육성 ③ 농축산 서비스산업	• (스마트) 스마트 농업·축산업 확산 • (인력) 청년농 유입 촉진 및 귀농 정착 지원, 일자리중개 강화 • (서비스) 교육·컨설팅 확대, 위탁 서비스업 육성, 신자격·직종 확대, 공공서비스업 활성화
농식품 분야 신성장동력 확충	④ 농식품벤처·신산업 ⑤ 수출시장 개척 ⑥ 치유·휴양 산업	• (벤처) 농식품벤처 육성,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스마트농기계산업 활성화 • (수출) 농식품, 동물용의약품, 스마트팜플랜트, 종자 수출 촉진 • (치유) 산림 휴양·레포츠 및 말 산업 육성,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확대
식품·외식산업 새로운 돌파구 마련	⑦ 기능성식품 등 식품산업 고도화 ⑧ 외식산업 외연 확장	• (식품) 기능성, 간편, 신전통 식품 및 펫푸드시장 육성, 청년 창·취업 지원 • (외식) 공유경제 활성화, 외식소비 진작, 외식 전문인력 양성
농촌 일자리 다양성 확충	⑨ 로컬푸드 체계 확산 ⑩ 농촌산업 육성 및 경제활동 활성화	• (로컬푸드) 소비·공급 체계 확산, 공공·학교·군 급식 활용 • (농촌) 융복합·관광산업 육성, 사회적경제 및 귀촌 활성화

정책동향

- (주요 내용) 농업·식품·농촌분야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寶庫)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이 유망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겠다는 계획

  ※ 10대 유망 분야: ① 스마트 농축산업, ② 청년농업인 육성, ③ 농축산 서비스산업, ④ 농식품 벤처·신산업, ⑤ 수출시장 개척, ⑥ 치유·휴양 산업, ⑦ 식품산업 고도화, ⑧ 외식산업 외연 확장, ⑨ 로컬푸드, ⑩ 농촌산업

❑ 10대 유망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1. ICT와 결합한 스마트 농축산업 활성화

① 스마트 농업: 스마트 팜 현장 보급 및 전문가 양성

○ '지역특화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조성 추진 검토

※ 지역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특화 품목을 선정하여 스마트 농기계, 자동관수시스템, 유통시설 및 데이터 수집·통신 기반 구축

- 혁신밸리 외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추가 조성 추진

○ 노후화된 온실 중심으로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하여 ICT 설비, 온실 기자재 및 설계·시공 등 분야의 인력 채용 촉진

※ 스마트팜 보급계획(누적, ha): (2020) 5,017 → (2020) 5,621 → (2021) 6,263 → (2022) 7,000

○ 용도 폐지된 터널, 지하공간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생산·체험·소비가 연계된 인공광 이용 실내농장 구축 및 창업 지원

○ 스마트 농업에서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분석·가공·제공하는 농업과 ICT 융복합 전문인재 양성※

※ 농업연구센터 및 ARC를 통한 인력 양성, 민관협력 교육과정 신설 등 추진

② 스마트 축산 확산: 스마트 축사로의 전환

○ 중소규모의 산재된 노후 축사 등을 집적한 ICT 스마트 축산단지인 '미래형 스마트 축산단지' 시범조성 추진(2022년까지 4개소)

- 가축질병 및 악취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축사의 스마트화를 지원하여 스마트축사 보급 지속 확대※

※ 스마트축사 보급목표(누적): (2019) 2,150호 → (2020) 3,150 → (2021) 4,350 → (2022) 5,750

정책동향

○ 수의사 등 기존 축산 컨설턴트를 축산과 ICT에 대한 지식·노하우를 전수하는 스마트축산 컨설턴트로 양성

-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축산ICT 컨설턴트 교육프로그램 개발※

※ 축산전공자는 ICT 역량을, ICT 전공자는 축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과정 개발

2. 청년농업인 등 농업인력 육성

①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한 취·창업 지원 확대

○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및 농지·자금 등 패키지로 지속 지원(2019년: 1,600명)

- 청년농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후계농자금 상환기간 연장 검토※

※ (현행) 3년 거치 7년 상환 → (개선 검토) 5년 거치 10년 상환

- 직거래장터, 온라인 몰 등 다양한 판로※ 개척 지원

※ 공영홈쇼핑 입점(7월), G마켓·옥션 특별전(8월), 우체국쇼핑몰 입점(9월) 등

○ 청년농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농업분야 인력 육성 방안※' 마련(2019년 말)

※ 주요 내용(안): 지원대상을 승계농·신규창업농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 추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영농정착지원사업 개편 및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②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 지원

○ 예비 귀농인과 취농인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확대※

※ 비농업인 대상 찾아가는 귀농 교육 추진, 귀농한 청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장기체류형 교육' 강화, 창업 희망 귀촌인 대상으로 '영농·농산업 창업지원 교육' 확대

○ 귀농인과 가족이 함께 1년간 거주하면서 영농 체험과 농촌 정착을 돕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본격 운영(8개소, 2019년~)

○ 선배 귀농인, 품목전문가 등을 통해 영농기술 등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1:1 맞춤컨설팅(귀농닥터) 지원 강화

③ 농업 일자리 중개기능 강화

정책동향

○ **농촌인력중개센터**(2019년 50개소)를 통해 **농촌 인근 도시** 및 **지역**의 **유휴인력**과 **구인처 간 일자리 연계 확대**

○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구인·구직 전문업체(알바몬, 알바천국 등) 간의 협업을 통해 **농업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중개 지원** 추진

3. 농축산 민간·공공 서비스산업 활성화

1 농식품 교육·컨설팅 산업 육성

○ **농업·농촌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 교육·컨설팅 시장**을 **확대**※하여 **전문강사** 및 **컨설턴트**의 **고용 유도**

※ 컨설팅업체 인증제도 확대 적용, 컨설턴트 등록제 활성화, 농업·농촌 관련 교육·컨설팅 사업시행자로 민간기관·기업의 참여를 확대

○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도시농업관리사**와 **가축인공수정사** 등의 **강사·컨설턴트**를 **육성**하고, **현장**에 **활용**

2 가축관리 등 전문 위탁서비스업 활성화

○ **전문 해충방제업**(가축방역위생관리업, 2019.7월 시행) **활성화**※

※ 산란계 사육마릿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문업체를 통한 소독·방제 의무화(2021년~, 10만 수 이상), 5만 수 미만 산란계 농가에는 '닭 진드기 공동방제사업' 지원

○ **밭농업 농작업 대행**※ 및 **드론방제**※※ **서비스산업 활성화**

※ 주산지 중심으로 지역농협을 통한 농작업 대행 인력 채용 지원(2019년: 68개 농협)

※※ 영농 규모가 큰 벼를 중심으로 농협과 민간업체의 드론방제 서비스 확대 추진

3 동물보건사, 양곡관리사 등 새로운 자격·직종 활성화

○ 수의사의 진료 보조 및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신설**※

※ 「수의사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2019.4월), 법 개정 2년 후 시행 예정(2021.下)

○ 쌀의 가공·보관·소비분야 전문가인 **'양곡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2019.6월)하고, **정부양곡 관리**에 **양곡관리사**를 **활용**(2020)

정책동향

○ 농업인의 산재 예방을 위해 농작업장 위험성 평가, 안전지도, 교육·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인력 육성**※

※ 국가기술자격자 배출(2019.8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 등에 활용(2020년~)

○ 국가기술자격 신설 추진 중인 **스마트농업기사** 및 **치유농업사** 등과 같은 **유망한 직종·자격 발굴** 및 **국가자격** 등 **제도화 검토 지속** 추진

4 농식품 유관기관 공공서비스 확대

○ **가금류 축산물 이력관리, 가축방역, 농업인력 육성,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원 인력**※을 **확충**

※ 2019년 채용 계획(명): (축평원) 42, (방역본부) 147, (농정원) 13, (aT) 13

4. 농식품 벤처·투자 활성화

1 농식품 벤처기업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 **'농식품벤처창업센터**(A+센터, 7개소)' 를 통해 **벤처·창업 기술, 제도개선** 등을 **밀착 지원**

○ **농식품 벤처창업 사업화 자금 규모 확대**※ 등 자금 지원 강화

※ (2018) 100개 업체 x 1천만 원 → (2019) 250 x 최대 2천

-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우수기술사업화 정책자금'** 대상을 **농식품 벤처·유망 기업까지 확대**

○ **농식품 스타트업·청년 벤처**에 대한 **민간 투자생태계 조성**

- 농식품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민간 엑셀러레이터**※ **선발·육성**

※ 유망한 창업 초기 기업을 발굴하여 엔젤투자·사업공간·멘토링 등 종합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기획자

- 기존 투자시장 활용이 어려운 **청년 농업벤처기업**(창업 5년 이내)에 **투자**하는 **'농식품벤처펀드' 결성**(2018~2022년 625억 원 조성 목표)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 벤처창업**을 위한 **플랫폼 구축**※

※ 식품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식품창업허브(컨설팅 → 시제품의 제작 → 임대형공장)' 구축, 창업 Lap 지원(2019: 24팀) 확대 등 검토

2 농촌 재생에너지 및 스마트농기계 산업 활성화

○ 농촌 재생에너지 사업의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리인력 양성

- 농업인 태양광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의 영농형태양광 일시사용기간 연장(8년 → 20) 추진

※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2018.12월, 의원입법)

- 고령농 등에 대한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컨설팅 지원, 영농형태양광 설비 사후관리, 재생에너지 통계구축 등 관리시스템 마련 검토

○ 밭농업 기계화를 위해 IT·BT 기술을 활용한 정밀 파종·정식기·수확기를 개발, 지역농협 등 공동작목반에 보급

- 농작업의 자동화·무인화를 위해 5G기술을 활용 첨단농업기계 개발※

※ 자율주행트랙터(2020), 자율주행이앙기 개발(2022), 자율주행콤바인 개발(2023)

5. 농식품 플랜트 등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

1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로 관련 일자리 창출

○ 수출 통합조직※ 품목·운영인력을 확대하고, 수출 농산물 안전성 관리 플랫폼(농집)에 농가정보 입력을 지원하는 코디※※ 지정 확대

※ (2018) 딸기·버섯·파프리카 결성 완료 → (2019) 포도 결성 완료, 절화류 등 확산 추진

※※ 2019년 170명 지정 → 매년 10명씩 추가 지정(전문단지 지정 증가 추세 반영)

○ 수출기업의 규모·역량을 고려한 단계별 맞춤지원으로 중견·성숙기업을 육성하고, 내수기업의 수출 전환 지원사업(바우처) 추진

○ 현지 마케팅을 위해 수출 권역별 K-Food Fair를 개최하고, 미개척 시장에 청년해외개척단을 파견(2019년: 100명)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2 동물약품 수출 확대

○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 선진화, 해외 수출시장 개척 지원 등 지원※

※ (제조시설 선진화) 시설·개보수 융자지원, GMP 컨설팅 지원

※ (수출 지원) 해외 전시회, 시장개척단, 마케팅, 원료 구입 및 운영자금 등 지원

3 스마트 기술·설비 등 농식품 플랜트 수출 시장 개척

○ 한국형 스마트팜(K-Farm) 플랜트 수출을 위해 스마트팜 전략시장(중동, 중앙아시아 등) 데모 온실(1ha) 설치 등 지원 검토

- 데모온실이 위치한 해외 거점별로 전문 재배사, 교육전문가를 파견하여 한국형 스마트팜 교육·운영 지원 검토

○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국가별 특화정보를 구축※하고, 해외 인허가 취득비용과 마케팅·제품테스트 비용 지원 확대 검토

※ 농업·시장 현황, 현지바이어, 등록·인허가 제도 등

4 Golden Seed 프로젝트를 통한 종자 수출 활성화

○ 'Golden Seed 프로젝트※' 를 통해 전략 품종개발 및 시장개척

※ GSP 품종개발 실적(2013~2018년 누계): (수출전략) 294품종, (수입대체) 251품종

- 국가별 전략 품종 시범포 운영 및 박람회 참가 지원

※ (2019) 해외 육종기지·전시포 32개국 144개소, 국제 종자박람회 등 참가지원 4회

○ 국제종자교육센터 설립(2019), 채소육종연구센터(ARC)를 통해 석·박사급 고급 육종인력 양성

6. 치유·휴양 산업 활성화

1 산림 휴양·레포츠 산업 활성화

○ 자연휴양림과 지역별로 복합 산림레포츠단지를 조성

- 기존 휴양림의 공간과 연계※하여 특화된 산림레포츠 시설 운영

※ 청태산휴양림(산악스키), 방장산휴양림(패러글라이딩), 용화산휴양림(암벽등반) 등

○ 산촌과 연계한 '숲+여행' 을 테마로 산림휴양 관광 활성화※

※ 산림경관 자원 등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주민사업체 육성, 산림자원과 휴양·레포츠 활동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브랜드화

○ 산림레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신설 및 국·공립시설 우선 배치 검토, 장기적으로 산림레포츠 전문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산업화 추진

2 말 산업 활성화

○ **재활힐링센터 전국 확대 설치**※, **학생·재활·사회공익 승마체험 지원**※※ **확대**로 재활·힐링 등 **승마 지도자 분야 일자리 지속 창출**

※ 재활힐링센터: (2017) 7개소 → (2018) 11 → (2019) 14 → (2022) 17

※※ 승마체험 지원규모: (2017) 4만 명 → (2018) 6.9 → (2019) 7 → (2022) 8

○ **말산업 국가자격 상위등급**(기존: 3급 → 개선: 1~3급)을 **시행**하고 **승마지도사**를 **승마시설 안전요원**으로 **배치 추진**(2020)

○ 말산업 전문인력 인턴십 지원, 말산업 선진국 취업기회 제공 확대

3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확대

○ **반려동물 관련 신규 서비스업**※ **정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반려동물 생산업, 판매업, 전시업, 위탁업, 미용업, 운송업, 장묘업 등

- **펫시터, 펫시터중개업** 등 **신규 서비스 업종 확대**(2019년 말)

- **반려동물 훈련지도사** 등 **국가자격 신설**(2019 근거 마련), **동물미용자격**(민간자격)의 **국가공인화**(2020)로 신규 취업 지원

○ **반려동물 보호·교육·문화 인프라**를 **확충**※

※ 인프라: 공공 동물장묘시설, 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지원센터, 반려동물놀이터 등

※ 연도별 인프라 구축(개소): (2019) 8 → (2020) 12 → (2021) 10 → (2022) 10

7. 기능성식품 등 식품산업 고도화

1 기능성식품 시장: 규제 개선 및 중소시장 확대

○ **일반식품**도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증명될 경우, **기능성**을 **표시**(2020 시행 예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능성식품 시장 활성화 지원**

- **중소 식품기업**의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 역량 강화 지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능성식품 제형센터 구축을 추진(2020~)하여 중소기업이 분말, 액상 등 다양한 제형을 개발하도록 지원 및 기술 전수

※ 수입소재를 대체할 국산 소재 발굴: (2019) 25개 → (2020) 35 → (2022) 75

정책동향

2 펫푸드 시장: 기준규격 정비, 품질관리로 시장 활성화

○ **펫푸드 전용 표시기준 및 인증제** 등을 **마련**※하여 **시장 확대 기반 마련**

※ 양축용 사료 기준과 분리하여 펫푸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원료·가공·표시 기준 정비·개선(2019~), 펫푸드 기능성 표시제 도입(2020) 등 추진

○ **국내산 원료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프리미엄 펫푸드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2020~2021)

※ 국내산 원료 사용 제조업체 '사료종합지원사업' 시설·운영 자금(융자, 530억 원) 등을 우선 지원하고, 국내산 원료 생산업체 시설·운영 자금 지원 사업 추진

※※ 곤충 등 펫푸드 원료 다양화 및 고급화를 위한 R&D 사업 추진

3 간편식 식품 시장: 기술개발 · 원료공급 · 소비촉진 체계 구축

○ **중소기업**의 **가정간편식 기술력 향상 지원** 및 **원료 공급체계 개선**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가정간편식(HMR) 연구센터 구축 추진

- **가공용 쌀 신품종 개발**(면·술용 등 5종, ~2023년), **가공용 쌀 전문 생산단지 조성**

○ **새벽배송** 등 새로운 **신선식품 유통망을 활용**한 **간편식 시장 확대 추진**※

※ 원료조달·물류체계의 공급망관리(SCM) 분석 및 소비자 선호품목 등 시장조사를 실시(2019)하고, 산지의 생산·유통 인프라 연계방안 검토(2019년 말)

4 새로운 전통식품 시장: 소비 트렌드에 대응한 고급화 · 다양화

○ **주세 종량세 전환**※에 **대응**한 **우리 술 고급화·다양화 및 소비 촉진**

※ (현행) 출고가격에 비례한 종가세 → (개편) 용량 또는 도수에 비례한 종량세

- **우리술 품질개선** 및 **국산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연구**, 전통주 제품의 다양화·차별화를 위한 **분류·표시 체계 마련** 등 **지속 추진**

- **프리미엄 막걸리·와인** 등 우리 술 외연확대를 위한 **술 품질인증제 개편**※

※ (현행) 원료에 따라 유형화(가형·나형) → (개편안) 품질에 따라 3단계 등급화

※ (2019.下) 연구용역 추진 → (2020) 막걸리 시범운영 → (2022) 8개 주종으로 확대

○ **김치·장류** 등 **발효식품 시장**의 새로운 **성장산업화 인프라 조성**※

※ (김치) 맛·숙성 표시제 도입(2021년), (소스) 소스산업화센터 활용(2019.9월 준공),
(발효식품) 발효미생물산업화 지원센터 구축(~2020년, 순창), 우수·기능성 종균 발굴·배양

5 새로운 식품산업을 이끌 청년 취·창업 생태계 구축

○ BT·IT 등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 식품기업 창업 촉진**

- **식품분야 기술거래이전 지원 대상**에 **푸드테크**를 **포함**※하고, **기술거래기관 지정 확대**(2019년 3개)

  ※ (현행) 식품 제조·가공 분야 특허 → (개선) BT, IT와 융합한 푸드테크 분야 확대

- 원천기술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민-관-학 협업**의 **푸드테크 창업교육 확대** (2019년 10팀)

○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과 **식품기업 간 상생 촉진**

- 대학생이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식품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청년 농식품 스토리텔링 디자인단**※ **시범운영 검토**

  ※ 디자인 및 마케팅 전공 대학생 팀(팀당 5인 이내)으로 구성

- **식품산업 청년 일자리성공패키지**※를 **확대**(2018년 권역별 4회 → 2019년 5)하여 식품분야 진출희망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

  ※ (역량교육) 푸드테크 TED형 강연, 식품산업 트렌드 교육, 면접 컨설팅 및 커리어 코칭, (네트워크) 식품기업 채용설명회, 인사채용 간담회, 지역 강소식품기업 탐방

8. 외식산업 외연 확장

1 공유경제 활성화로 청년 창업기회 확대

○ **청년 오너셰프들**이 **주방·매장·고객**을 **공유**하는 **창업공간**을 **조성**, 임대료·물류비 등 **창업 초기 비용부담 완화**

- 배달음식·편의점도시락 등 외식트렌드 변화를 고려한 외식 상품·경영모델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유주방 사업구조 다변화 지원**※

  ※ 사업공간 확보 및 인테리어, 교육·컨설팅 및 자체 네트워킹 활동(정보공유, 워크샵, 공동구매 조직화 등)을 지원

○ 청년 창업주의 역량강화 및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을 **확대**(2019년 200명)하고, 공유주방과 연계

2 외식소비 진작을 통한 외식고용 안정화

○ 푸드페스타 개최, 여행주간 맛집 프로모션 등을 통해 외식소비를 촉진하여 외식업 매출 향상 및 고용 안정·창출 지원

- 푸드페스타 행사를 2019년 하반기에도 개최, 지역 맛집 홍보 강화※ 등으로 지역 외식업소까지 파급효과 확대

※ 우리동네 맛집 알리기 이벤트, 지역별 맛집 선정 및 TV 먹방 프로그램 활용 등

3 외식분야 창·취업희망자의 전문성 강화

○ 국내외 청년 인턴기회※를 확대하여 외식분야 취업경쟁력 강화

※ 2019년 지원(명): 해외한식 인턴(100), 외식기업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 및 인턴(20), 청년 한식당 창업 지원(20) 해외 한식조리인력 파견(40)

○ 외식 컨설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외식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검토

※ (사례: 부산, 골목상권 소상공인 서포터즈) 마케팅전문가, 컨설턴트, 부산대 대학생으로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명륜1번가 우수외식업지구 내 포토존, 방향제 설치 등 마케팅 지원

9. 로컬푸드 체계 확산

1 지속가능한 로컬푸드 소비체계 확산

○ 지역 생산·소비 여건에 맞는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지원

- 지역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푸드플랜 표준 모델(로컬푸드형, 먹거리보장형, 지속가능형) 보급 및 지역별 실증연구 지원(2022년 목표: 100개 지자체)

- 지자체와 먹거리계획 협약을 체결, 먹거리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농림사업을 패키지 지원(2019년: 7개 → 2020년: 14)하고, 전담 자문단(FD) 파견

○ 로컬푸드 직매장을 복합 시민교류 공간으로 개편※하고, 전국 확산※※

※ 레스토랑, 로컬요리교실, 먹거리 교육·문화시설 등 다양한 기능 추가

※※ 농협과 협력하여 로컬푸드 판매장 확대(2018년: 229개 → 2022년: 1,210)

정책동향

○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먹거리 관련 **신규 사회적 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하여 **시민참여 확대**

※ 시민사회와 지자체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푸드플랜 아카데미' 운영 확대, 매년 사례 공모전을 개최하여 다양한 민간 로컬푸드 모델·단체 발굴 등 추진

2 공공기관·학교·군급식을 활용한 로컬푸드 소비 기반 확대

○ **나주 혁신도시 선도모델**을 **순차적**으로 **전체 혁신도시**(10개)로 **확산**※

※ (2019) 전주·완주, 원주 → (2020) 김천, 진주 → (2021) 부산, 제주, 음성 → (2022) 대구, 울산

○ **군급식**에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 및 시설 확충**

- **군 급식 관련 협정서**(국방부-농협)에 **지역농산물 구매 의무 비율**(2022년까지 70%)을 **반영**(2019.7월) 하고, **접경지역** 등(15개 시·군)**부터 확산**

○ **로컬푸드 학교급식 모델 시범 구축** 및 **전체 학교급식**으로 **확산**

- **시범지역**(경북: 광역형, 안동: 기초형)에 **로컬푸드 공급모델**을 **우선 구축**하고, **매뉴얼**을 **마련**※ 하여 **전체 학교급식**으로 **전파**

※ 학교급식 식단, 식재료 정보를 수집·분석 후 표준화된 분류체계 및 코드 개발·보급 등

10. 농촌산업 육성 및 경제활동 활성화

1 농촌 융복합·관광 산업 활성화

○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충**

※ 지자체 농산물가공시설(시제품 개발·생산) 확대, 제품개발 전문인력 지원

※※ (성장 초기: 지역 내) 로컬푸드직매장, 농협 등, (우수제품: 대형유통망)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2019.7월)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작목 발굴·확산**을 위한 **대형 R&D 프로젝트 추진 검토**

○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로운 농촌관광 상품 개발**※·**홍보**를 **강화**하고, 농촌관광의 성장을 주도할 **전문 기업·인력 양성**※※

※ 농촌관광 힐링산업 현황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 관광명소 등과 연계한 농촌관광 프로그램·콘텐츠 발굴

※※ '농촌관광플래너' 직업사전 등재(농촌진흥청), 농고·농대의 농촌관광교과목 확대, 귀농·귀촌인 대상 농촌관광 인턴십·창업 교육과정 신설 등

ㅁ 정책동향

②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 **분야별 거점농장 지정** 및 **전문인력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농장**※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고용 등을 제공

○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 범위 확장**※ 및 **지속가능**한 **활동**※※ **지원**

※ 지역개발, 먹거리, 교육·문화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토록 역량 강화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사회적경제조직 생산품의 국내외 판매 지원 및 창업·경영·마케팅 등 종합컨설팅 제공 (농협, aT), 공영홈쇼핑·박람회 입점 지원, 직거래장터·수출현장코칭 사업 우선 선정

○ **다양한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산림형 사회적경제조직 확대**※

※ 선도 산림경영단지(500ha 이상 산림 단지화): (2019) 20개 → (2022) 29

※ 신품종 재배단지(사회적협동조합이 신품종 재배·공급): (2019) 2개 → (2022) 8

③ 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 정착기반 조성

○ **농촌 유휴시설**(빈집, 양곡창고 등) 중 사업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귀농·귀촌자**에게 **창업공간**으로 **제공**(2019년 20개소)

○ 여가·문화·보육 등의 생활 인프라를 갖춘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2019년 4개소, 120세대) **확대**

❑ 향후 계획

○ 농식품부는 차관을 중심으로 **10대 유망 분야별 추진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10대 유망분야**를 **구체화**하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도 **지속**할 예정

※ *2019년 하반기 발표 예정: △ 농업분야 인력 육성방안, △ 식품산업 활력 대책, △ 농촌 관광 2.0 대책 등*

○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ICT 기술의 발전**, **가치관 및 소비방식 변화** 등의 흐름이 **농업·식품·농촌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할 필요와 함께, 이러한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타 분야**에서 **줄어든 일자리**를 **흡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

정책동향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농식품 산업 및 분야〉

◈ **(스마트 농업)** 해외 연구기관 등은 향후 세계 스마트팜 시장규모가 연평균 12~14% 수준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

※ 화웨이 X랩(Huawei X Labs): (2015) 137억 달러 → (2020p) 268억 달러(연평균 14.3%↑)

※ Markets and Markets(미국 시장조사기관): (2018) 75.3억 달러 → (2020p) 135억 달러(연평균 12.4%↑)

– 한국형 스마트팜 개발업체인 '팜에이트'는 답십리역과 상도역에 '이동식 ICT 프레시팜'을 운영(2018년 전체 매출 440억 원)

◈ **(치유 및 레포츠)** 치유 목적 활동※ 및 레포츠 수요 증가※※

※ 2018년 여가 활동의 주된 목적(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대비): (마음의 안정과 휴식) 18.2%(1.3%p↑), (스트레스 해소) 14.7%(0.7%p↑) (가족과의 시간) 4.7%(1.7%p↑)

※※ 산림레포츠 활동 인구(산림청): (2017) 39만 명 → (2022p) 50만

– 반려동물 관련 펫푸드, 장신구, 간호서비스 등 산업이 성장세※

※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2014) 1.6조 원 → (2017) 2.3 → (2027p) 6

◈ **(새로운 식품)** 국내 식품 산업은 성장이 정체되는 성숙기에 진입, 기능성식품, 간편식, 고령친화식품 등 새로운 식품 시장 성장※(KREI)

※ 기능성식품: (2013) 1조 8천억 원 → (2017) 2조 7천억 원 → (2022p) 3조 9천억 원

※ 가정간편식: (2011) 1조 1천억 원 → (2017) 2조 7천억 원 → (2022P) 5조 8백억 원

※ 고령친화식품: (2011) 5.1천억 원 → (2015) 7.9천억 원 → (2022p) 1조 2.3천억 원

◈ **(온라인 식품 및 배달 음식)** 온라인 식품 및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18.8조 원※에 이르는 등 식품·외식 분야 온라인 거래 확대

※ 거래액(식음료품+농축수산물+음식서비스, 통계청): (2017) 13.2조 원 → (2018) 18.8

–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업체인 '마켓 컬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예측으로 상품 폐기율 1% 미만 유지 (매출액, 2015년: 30억 원 → 2018년: 1,571)

– 배달음식 서비스, 도시락·디저트 전문업체 등장, 영업시간 다양화(점심·저녁 영업 별도 운영) 등 외식업 형태 다변화 진행

◈ **(로컬푸드)** 미국 및 일본(地産地消 운동) 등에서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 중이며, 국내 로컬푸드 시장※도 빠르게 성장 중임.

※ 로컬푸드 직매장(개소/평균매출): (2013) 32개소/9.9억 원 → (2016) 148/17.3 → (2018) 229/19

◈ **(농촌융복합산업)** 농산물 생산·가공·판매, 농촌관광※ 등이 결합된 농촌융복합산업이 다양한 형태로 성장하면서 규모화

※ 농촌관광객(전체/외국인): (2014) 829만 명/– → (2016) 1,001/16.4 → (2018) 1,237/22.1

– '청양 알프스마을'은 '조롱박축제·얼음분수축제'와 '박속 화장품' 수출 등으로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8억 원, 직원 22명)

◈ 총괄정책 동향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자료 : 기획재정부(2019.7.25.)

❍ [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2019.7.25.] 정부는 2019.7.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

▌2019년 세법개정안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활기찬 경제·공정한 사회 구현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세정책 운영

◈ 경제활력·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에 역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도 지속 추진

비전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세제개편		
기본방향	경제활력 회복·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세입기반 확충
추진전략	투자활력 제고	일자리 지원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편의 제고
	소비·수출 활성화	서민 지원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혁신성장 지원	공정경제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

정책동향

▌2019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1.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❶ **(투자 활성화)** 생산성향상 ·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 주류 과세체계 개편, 가업상속세제 실효성 제고

❷ **(소비 · 수출 활성화)**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수출 중소 · 중견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확대,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부담

❸ **(혁신성장)** 신성장 · 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확대

2. 경제 · 사회의 포용성 · 공정성 강화

❶ **(일자리 지원)**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세액공제 대상 확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❷ **(포용성 강화)**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연장*,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생산직근로자 초과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지방소비세율 조정,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 확대, 행복기숙사 이용료등 부가가치세 면제

◈ **음식점 등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되, **과세유흥장소 공제율 인하**(4/104 → 2/102)

※ 연매출 4억 원 이하 개인음식점에 대해 우대공제율 적용(8/108 → 9/109) 및 모든 사업자에 대해 공제한도 +5%p 우대(2019년 말까지)

❸ **(공정경제 · 과세형평)** 공익법인의 공익성 · 투명성 제고, 지주회사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축소,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제척기간 조정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❶ **(납세자 권익보호)** 세무조사 절차상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조세불복 결정절차 투명성 제고,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경정청구 · 수정신고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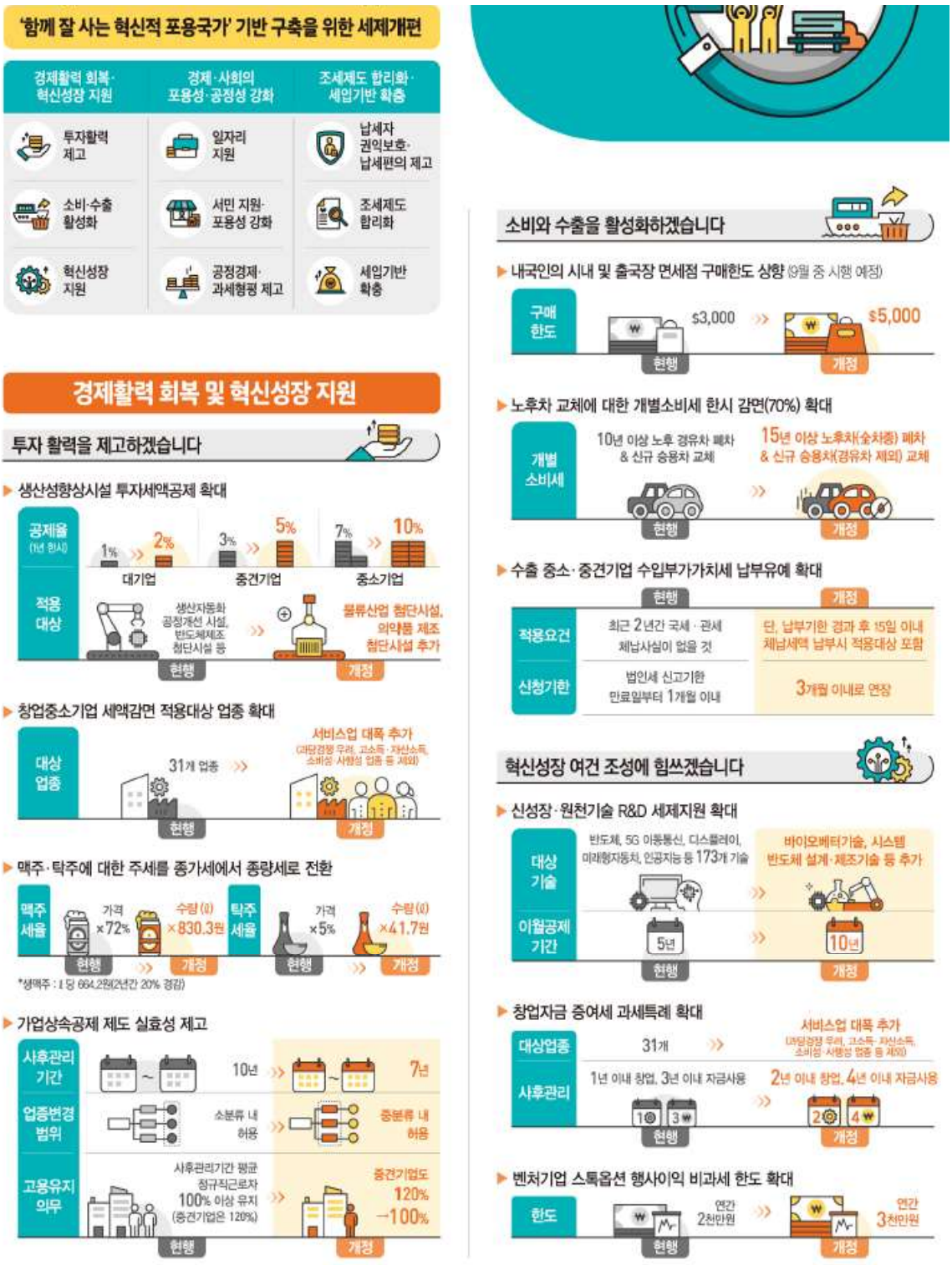
❷ **(조세제도 합리화)**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개선, 국세청 통계자료 공개 및 과세정보 공유 확대,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❸ **(세입기반 확충)**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임원 퇴직소득 한도 조정, 비과세 종합저축 정비,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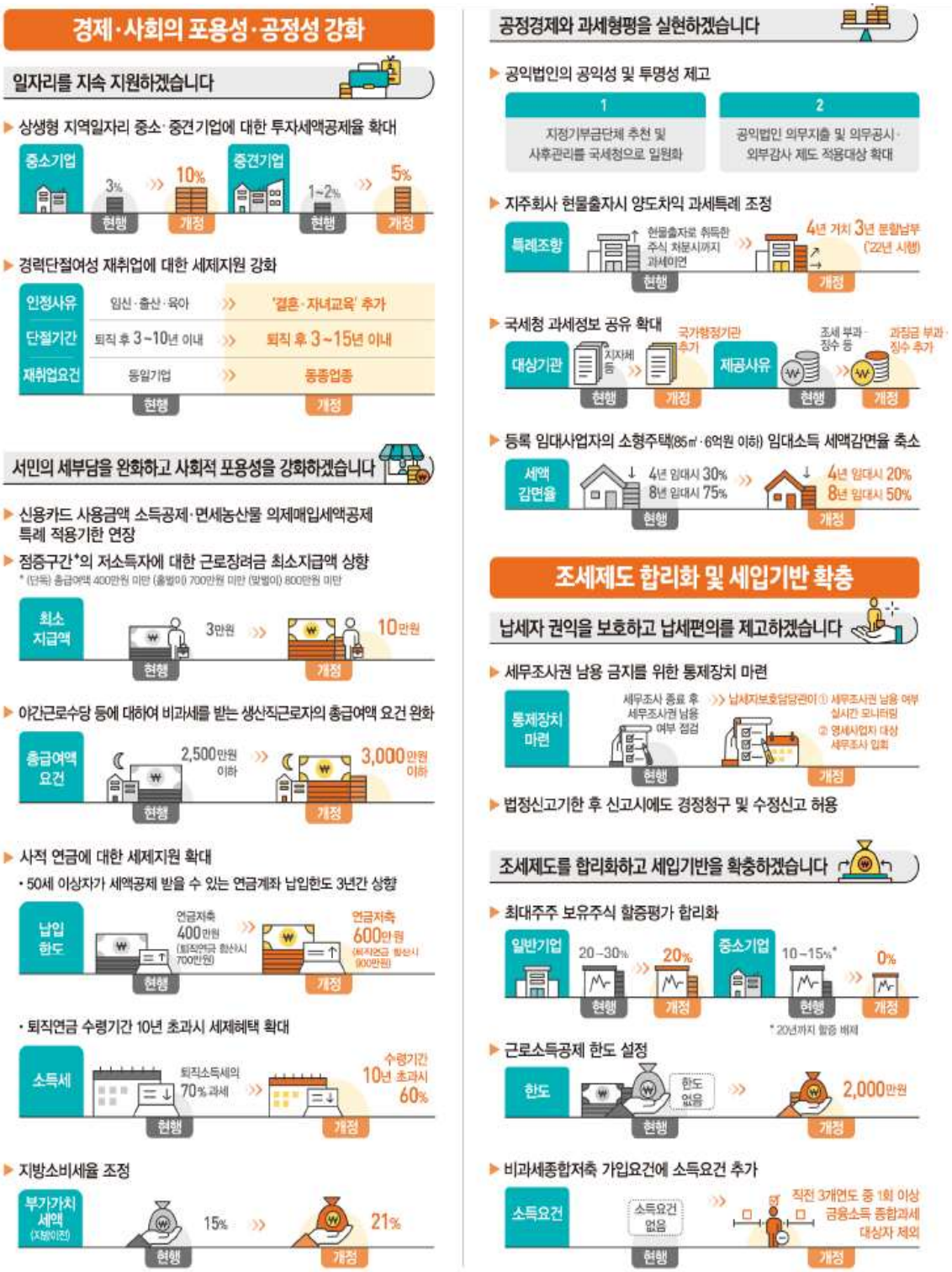
※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개정안"(보도자료, 2019.7.25.) 참고

- **(추진 일정)** (2019.7.25.) 세법개정안 발표 → (2019.7.26.~8.14.) 입법예고(19일간) → (2019.8.27.) 국무회의 → (2019.9.3.) 정기국회 제출

▌2019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



▌2019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



규제자유특구 7곳 지정 및 총 58개 규제특례 허용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19.7.24.)

❑ 개요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2019.7.24.]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2019.7.24.)하여, **세계최초 규제자유특구 7곳**※※ **지정**하고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를 **허용**

※ (참석) 위원장: 국무총리(주재) / 민간위원: 민간 위촉 위원(14명) / 정부위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16명)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 **(주요 의미)**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4법**의 **완성**을 **의미**※하며, 동시에 본격적인 **규제 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

※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 **(주요 내용)** △강원, 부산, 대구, 전남 등 **7곳 세계최초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 △특구기간 내 **총 매출 7,000억 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 기업유치 기대**, △**지방 중심**의 **혁신기업 육성**, 향후 **세계시장 진출 기회**도 **제공**, △기술개발에 열 올리는 **지방 청년 스타트업 육성**도 **박차**

❑ 주요 내용

○ **① 강원도·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진다.**

-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

※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행함.

-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정책동향

❍ **② 부산‥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도시가 된다.**

-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오프체인 방식**의 **실증특례**가 **부여**

- 이를 통해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적용**하게 됨으로써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 **③ 세종시‥시험운행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

-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 자율버스 운행 실증**을 **허용**해 **국내 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

- 이와 함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단계별**※ 로 **실증**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 (세종) 자율주행버스는 단계별 실증(단독 시운전 → 일반차와 함께 운행 → 승객탑승) 허용

❍ **④ 경북‥전기차 폐배터리가 희토류 광산이 된다.**

- 그동안 전기차 폐배터리 성능진단 및 등급분류 등의 기준이 미비하여 **전기차 보급확대**에 비해 **폐배터리 재활용** 등에 대한 **대비**가 **부족**

- 이에,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특례**를 **적용**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선도**해 나갈 예정

❍ **⑤ 대구‥의료기기 제조 인프라도 공유한다.**

-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을 완화해 **세계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허용**

- 그동안 첨단의료기기 제조 분야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장비구매 비용부담**을 **해소**해 **의료기기 분야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⑥ 전남‥초소형 전기차가 다닐 수 없던 교량위를 달린다.**

-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의 **단절**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전동퀵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가능**

- 또한, *1인승으로 제한돼 있던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차 인원을 2인승까지 허용해 함께 작업하는 농작업 현실을 반영하는 등 e-모빌리티 산업의 수요를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e-모빌리티 분야의 도약을 이끌 것으로 전망

정책동향

○ ⑦ 충북·가스산업안전을 무선제어로 지킨다.

- 그동안 유선으로만 이루어졌던 가스안전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 실증을 통해 세계최초로 무선제어 기준을 마련하여 무선기반 가스안전제어 산업을 육성

향후 계획

○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

-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추진

- 또한,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업을 정교하게 가다듬을 계획

- 안전성을 보완한 지정조건들이 실증에서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했던 분과위원장을 실증 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규제옴부즈만으로 임명할 예정

- 한편,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도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계획

○ 향후 2차 특구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2019.12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 특히 1차 지정에서 누락된 지자체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

○ 또한, 혁신을 위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개발에 매진하는 기업, 특히 청년 창업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 [기대 효과]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 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

◈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기간 중 매출 390억 원, 고용 230명 창출이 기대되며, 의료기 분야에 원격의료, 의료정보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신산업활성화로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대구 스마트웰니스) 사업기간 중 매출 1,570억 원, 고용 409명 창출 및 창업 14개사가 예상되며, 지역 ICT·의료헬스산업의 구조전환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

◈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2022년 이후 연 100억 원 이상 매출 발생 및 60억 원 가량의 유가금속 자원을 재활용, 초기단계 국내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견인 기대

◈ (부산 블록체인) 생산유발효과 895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9억 원, 고용유발효과 681명, 기업유치 및 창업 효과 250개사가 예상되며, 블록체인 및 응용 산업 육성과 함께 기존 지역강점산업(물류, 관광, 금융 등)의 고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세종 자율주행실증) 기업유치(매년 25개사 예상), 신규고용 222명, 사업화 매출액 170.6억 원, 특허 17건 등이 예상되며, 국내 최초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상용화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사업모델을 확인하고, 자율차 거점도시로 성장 기대

◈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생산유발효과 87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80억 원, 취업유발효과 575명 창출이 예상되며, 세계최초 가스기기의 무선 제어·차단 기술관련 제도를 정립, 해외 기술표준 선도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기대

◈ (전남 e-모빌리티) 2025년까지 기업수 7배(14개 → 100), 고용 10배(200명 → 2,000), 매출 10배(400억 원 → 4,000) 증가가 예상되는 등, 미래 신산업인 e-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행정안전부, 제1기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위촉

자료 : 행정안전부(2019.7.25)

❍ [행정안전부, 제1기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위촉, 2019.7.25.] 향후 국가 중심의 법령 제·개정으로부터 지방의 자치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될 제1기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위원 20명을 위촉

※ 지난 7월 1일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에 따른 자문단 구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처음 도입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해당 법령안의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

- (주요 내용) △위원들은 지방자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2019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2년간 임무를 수행,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법령안의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협의 결과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높여줄 예정

정책동향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법령 제·개정 시 중앙부처의 자치분권에 대한 전문성 및 인식 부족으로 지방 자치권 침해 발생, 자치단체는 사후적 문제 제기 및 법령 개선 요구

◈ **(필요성)** 제·개정 법령의 지방 자치권 침해 소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 자치분권의 제도적 보장 추진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주요내용(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검토지침 시행	제·개정안 관련 사전협의 요청서 작성 후 제출	지자체, 자문단 의견수렴 및 검토실시	자치권 침해여부 검토의견 회신	검토의견 불수용 시 해당 사유제출
(행안부장관 →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장 →행안부장관)	(행안부장관)	(행안부장관 →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장 →행안부장관)

◈ **(검토대상)** 중앙행정기관이 발의한 모든 제·개정 법령(연간 1,700여 건)

◈ **(지침수립)**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분권 사전협의의 세부기준 및 평가절차 등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협의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제·개정 시 입법예고와 함께, 자치분권 사전협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

◈ **(의견수렴)**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가 있는 쟁점 안건에 대해 지자체와 그 협의체 및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수렴 실시

◈ **(검토의견)**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최종 심사하여 입법예고 완료 전까지 개선방안 등 검토의견을 해당 기관에 통보

분야	주요 검토사항
사무배분의 적정성	• 사무구분의 명확성 • 국가 – 시도 – 시군구 사무배분원칙 준수 여부 • 사무위임 시 위임의 타당성 여부 등
국가 관여의 적정성	• 지도·감독의 필요성, 관여 최소화 원칙 준수 여부 • 사무성격(국가·지방·위임사무)별 적절한 지도감독 규정 여부
기타 자치권 침해 여부	• (자치재정) 사무신설·변경·위임에 따른 재원 지원방안 • (자치조직) 개별법에서 행정기구, 위원회 등 신설 여부 • (자치인사) 지방공무원의 임용·징계 등 인사권 사항 규정 여부 • (자치입법) 조례 규정 사항을 국가법령으로 규정 여부

◈ **(준수의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검토의견을 준수하도록 이행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해당 사유를 소명하도록 함.

정부혁신 평가 우수기관 포상 수여식 및 제4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행정안전부(2019.7.23.)

○ [농식품부-행정안전부, 정부혁신 평가 우수기관 포상 수여식 및 제4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개최, 2019.7.23.]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2019.7.23일 정부혁신 평가 우수기관 포상 수여식과 '제4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를 개최

- (정부혁신 평가 우수기관 포상 수여식) 농식품부를 비롯한 2018년도 정부혁신 평가 우수기관 12곳(대통령 표창 4, 국무총리 표창 8)에 대한 포상 수여

- (제4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 정부혁신 종합계획 3대 추진전략의 하나인 '참여와 협력'을 통한 국민 체감 혁신 우수사례로 농식품부의 「혁신적 사전예방 중심 협업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사례를 소개

▌정부혁신 평가 우수기관 주요 성과▐

훈격	기관	주요성과
대통령 표창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인 안전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 농업인 사회안전망을 강화 ※ 재해복구비 단가 인상(평균 3배), 재해보험 품목 확대(53개 → 57) • 한우 축산물 이력제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비용 및 시간 절약 ※ 축산물 유통과정 문제 발생 시, 원인 추적기간 최대 6일 → 10분 이내로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도입하여 검사결과를 대국민 공개 ※ 인터넷 방문자 39만 명, 청원 547건, 검사 3건(영유아용 물휴지 등) • 필수치료제 국내자급 성공으로 희귀 · 난치질환자 치료 기회 확대 ※ 카나마이신 주사, 답손 정제 등 필수의약품 안전공급을 위해 정부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ICT활용 똑똑한 생활쓰레기 처리체계 구축 ※ 스마트 압축컨테이너 설치(3개소), 종량제 봉투 제작비용 절감(13억 원), 이산화탄소 발생량 감축(연간 693톤) • 버스와 택시를 연계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 어르신행복택시(일 600건), 버스 → 택시 환승행복택시(일 50건) 운영
	서울특별시 성동구	• 열린 복합문화공간 '성동책마루' 조성 ※ 이용자 현황: 137,266명(일 1,000명 이용), 연중무휴(24시간 운영) • 어르신 일자리 창출 성동 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운영 ※ 15개 사업장 운영, 134명 일자리 창출

정책동향

국무총리 표창	고용노동부	•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를 폐지하여 산재신청 장애요소 제거 ※ 산재신청 건수 126,396건(전년 대비 21.5%↑), 평균 소요기간 3.1일 단축 • 청년이 원하는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온라인 청년센터」 구축 ※ 62개 정부 정책 및 160개 공간 정보제공, 하루 평균 1만 5천 명 방문
	농촌진흥청	• **민관 협업**으로 **돌발해충 협업방제체계 구축 강화, 해충피해 감소** ※ 돌발해충 협업방제 추진실적: 74,322h(전년 대비 14.6%↑) • **청·병원·민관전문가 합동 찾아가는 이동식 농업종합병원 운영** ※ 농업기술, 의료, 생활시설 수리 등 서비스 제공)
	해양수산부	• 정부조직 최초 '조인트 벤처 1호' 운영으로 「오션드론 555」 전략 수립 ※ 5대 지역 거점 중심으로 드론허브를 구축하여 해양 감시체계 혁신방안 수립 • 도서지역민의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운영 ※ 9개 항로 운영(1일 생활권 구축항로 4, 연속 적자항로 5)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자 제재,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 수사의뢰 109건, 징계절차 회부 255건, 채용완료 245명, 채용기회 부여 25명 •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원분석, 실시간 민원 현황판 대국민 공개 ※ 대국민 서비스 42종, 주요 공공 데이터 3종 공개
	세종특별자치시	•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 협업**을 통한 **축산악취 해결** ※ 축산악취 제거시설 설치(47동), 악취민원 감소(2014년: 135건 → 2018년: 16건) •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 ※ 주민심의위원회(20명)를 통한 인사추천제 시범 운영(조치원읍)
	전남 여수시	• 민원 SNS 신문고 활용, 시민 공감·소통 강화 ※ 친구수(1,102명) 및 민원처리(477건), 재난안전 관련 카톡 전송(2회) • 첨단기술 활용 전통시장 공공서비스 개선 ※ 화재감지센서 등 IoT기반 시설 조성(447개 점포) 및 가스시설 GIS 구축
	충북 증평군	• 도서관을 문화·교육예술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육성 ※ 누적 이용객(100만 명), 독서캠프·옥상극장·버스킹 등 16개 프로그램 운영 • 배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문해교육 '동행학당' 운영 ※ 비문해 어르신 교육(30개 마을, 300명), 문해교육사 양성(27명)
	광주광역시 서구	• 청춘발산공작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창업지원(8팀), 취업지원(상담 616명), 취업박람회(2회), 지도교육(3회) 등 • 원룸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으로 안심환경 조성 ※ 원룸 인허가 시 범죄예방 시설물 80건 적용

◈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정부 혁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다." 라며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 혁신을 통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번에 포상을 수상한 기관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였다." 라며 "이러한 성과들이 범정부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언급

중소벤처기업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전담 TF 설치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19.7.23.)

○ [중소벤처기업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전담 TF 설치, 2019.7.23.]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미래산업전략팀이 가동되며, 2021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 ◈ (시스템반도체 분야) 중소벤처기업이 261개 업체에 불과한 사실상 불모지로 설계(팹리스)-생산(파운드리)-수요 기업간 연계가 부족한 분야
>
> ◈ (전기·미래차 분야) 중소·벤처기업들에게는 아직 초기 단계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아 관련 부품업체들이 도태 기로에 있으며,
>
> ◈ (인공지능(AI) 분야)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소 격차가 있다고 보고 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절실

- (주요 내용)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과 현장 소통을 강화할 예정, △전문멘토단 150명을 구성하여 멘토와 기업 간 상시 컨설팅도 진행, △중소기업과 전문멘토단이 250개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과 함께 과제를 설계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

  ※ 그동안 기업이 정부 사업을 찾아서 신청하는 정부 주도의 기능별(R&D, 인력, 마케팅, 자금 등) 지원방식

- (향후 계획)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2020년 최저임금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 개최

자료 : 고용노동부(2019.7.24.)

○ [고용노동부, 2020년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대표 간담회※ 개최, 2019.7.24.] 2019.7.24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과 관련하여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

※ (참석)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기준정책관, 통합고용정책국장, 청년고용정책관,
(청년) 전국청년상인연합회 김태응 대표,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여성)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한국여성노동자회 박명숙 부대표,
(장년) 광주경비원일자리협의회 박용호 동구지역 대표,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

- (개최 목적)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관련,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현장의견 수렴

정책동향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 최저임금액 시간급 8,590원, 전년과 비교했을 때 2.87% 인상(240원 증가) ※ 월 환산액 1,795,31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에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의제기 접수 외에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계획,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임금격차 해소는 최저임금 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통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

- (향후 계획) 정부에서는 올해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및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찾아서 추진할 계획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동향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7.24./7.26.)

❑ WTO 일반이사회 계기 일본 수출규제 조치 문제점 역설

○ [정부, WTO 일반이사회 참석, 2019.7.23~24., 제네바] 정부는 7.23-24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가 국제사회에 끼칠 폐해를 설명하고 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였으며, 일본 측 대표단에 본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1:1 대화를 제안

- (의의) 금번 이사회 참석은 WTO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일본 측 조치의 문제점을 전파하는 동시에, 본 건에 대한 일본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부각시켰다는 데 의의

※ 매 2년 개최되는 각료회의 외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

○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 측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간 갈등에서 기인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는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임을 엄중히 경고

※ “using trade as a political tool”, “disrupting trade for political purposes”

- 자유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가이자 G20 의장국으로서 자유·공정무역을 강조※하였던 일본이, 불과 한 달 만에 이와 정반대인 조치를 한국만을 특정하여 취한 것에 대해 항의

※ “a free and open economy is the foundation of global peace and prosperity” (G20 정상회의 당시 아베총리 발언)

정책동향

- 일본 측 조치는 한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산업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나, 국제적 분업 구조 상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산업생산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상기 사유를 들며, 일본 측에 조치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

○ 한국 측은 일본 측이 우리의 협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던 점을 지적하고, 양국 관계 부처의 고위급이 이사회 참석차 제네바에 온 이상, 현지에서 양국 대표단 간 별도의 1대1 협의를 진행할 것을 일본 측에 제안

○ 일본 측은 자국의 조치가 강제징용 사안과 무관하며, 이는 안보상의 이유로 행하는 수출관리 차원의 행위이므로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였고 아울러, 한국 측의 1대1 협의 제안에는 별도의 응답을 회피※

※ 일본 측 발언자: 이하라 준이치 WTO 대사(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은 미발언)

○ 한국 측은 일본 측의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에 강한 실망감을 표명하고, 일본 측이 구체적 사유의 적시 없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점, 계속된 협의 요청에도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해 온 점 등을 강하게 비판

○ 한일 양국 간 입장 대립이 첨예한 사안인 점을 감안, 제3국에서는 별도 입장 표명을 자제하였으며, 이사회 의장(Kangvalkulkij 태국 WTO대사)은 양국 간에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

○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사회에 일본 측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하여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

❑ 통상교섭본부장, 美 경제통상인사 대상 일본 측 조치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019.7.23.일~7.2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하여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美 경제통상 인사들을 중심으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美 산업 및 글로벌 공급망 영향 등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확산

◈ 금번 일본의 조치는 기술적 우위와 무역의존도를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신뢰와 국제무역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선례이며,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미국 수요·공급기업 등 관련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

◈ 조치 발표 이후 반도체 D램 가격이 20% 이상 인상되는 등 이미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 또한, 일본 측의 금번 조치가 한미일 공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

정책동향

❍ 美 의회·업계 인사 및 전문가들은 동 사안이 경제와 안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며 우리 입장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혀

- (의회) 의회 인사들은 한미 동맹과 동북아 역내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 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

- (업계) 美 업계는 일본 측 조치로 인한 영향을 이미 체감하기 시작했고, 한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제기한 대로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공감, 동 조치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표명

  ※ 일본 수출규제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유 본부장의 설명에 대해, 미국반도체산업협회장은 금번 조치 관련 미국 내 6개 단체 공동명의의 서한을 직접 전달

〈美 6개 단체 공동서한 주요 내용〉

◈ (참여기관)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정보기술산업협회(ITI), 전미제조업협회(NAM),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컴퓨팅기술산업협회(CompTIA), 소비자기술협회(CTA) 등 6개 단체

◈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소재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

-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수출통제정책의 변화는 공급망 붕괴 및 출하지연을 초래하며, 글로벌 업계와 노동자도 장기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글로벌 ICT산업과 제조업에의 장기적 손상을 피하기 위해 동 이슈의 조속한 해결과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촉구

- (전문가) 우리 측은 미국 내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일본 측 조치의 모순점, 글로벌 경제 및 국제 무역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조목조목 상세히 설명, 필요한 계기에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

❍ 유명희 본부장은 미국 내 제조업 등 산업과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로스 상무장관※과 면담하여 일본 측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 입장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

  ※ 미 상무부 BIS(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산업안보국): 수출통제 업무를 총괄하며 국가안보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지, 수출촉진, 첨단기술 분야 업무 담당

- 로스 상무장관은 금번 조치가 미국 산업 및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리 측 설명에 공감하고,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

❍ [향후 대응] 일본 수출규제조치 관련 향후 대응에 대해서 △국내적··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대외적··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대화 노력을 이어나가고, RCEP 장관회의(2019.8.2.~3., 중국 북경)를 포함한 다자·양자협의 계기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

G7, 디지털세 과세방안 원칙에 합의

자료 : 기획재정부(2019.7.23.)

❑ 개요

○ [G7, 디지털세 과세방안 원칙에 합의, 2019.7.23.] 2019.7.17~18일 프랑스에서 개최된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디지털세 과세원칙에 대해 합의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 (추진 배경)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라 국제 조세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점 발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심으로 디지털경제의 과세방안 논의 중※

※ 그간 디지털세 논의 경과: 2015년 OECD BEPS 1번 과제(Action1)로 채택 → 2018.3월 중간보고서(장·단기대책) 발표 → 2020년까지 최종 보고서(장기대책) 발간 목표

◈ 디지털기업은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 활동이 가능하여 소비지국에서 법인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음(가치창출과 과세권의 불일치 문제).

※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 상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 가능

◈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에 이전하고 소비지국에서 로열티 등 비용 지급을 통해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 증가(벱스※ 악화 문제)

※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 주요 내용

○ 2가지 접근방법(2 pillar approach)을 병행하여 2020년까지 국제적 합의 도출

- ① (pillar1)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 간 과세권(이익) 배분 규칙을 도출하여 소비지국 과세권 강화

- ② (pillar2)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a minimum level of effective taxation)

※ 세율은 추후 구체적인 과세방안 논의 후 결정

○ 새로운 국제조세체계는 단순하고 집행이 가능해야 하며, 이중과세 방지 등 조세확실성 제고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절차 마련

정책동향

○ 금번 G7 합의내용은 지난 2019.6월 G20회의 합의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주요 선진국이 2020년까지 디지털세 합의 도출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의미

- 이는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내용으로 최근 프랑스※, 영국 등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단기대책(매출액 기반 과세 또는 디지털 서비스세)과는 다른 것

※ 미 무역대표부(USTR)는 프랑스 디지털세(2019.7.11일 국회 통과)가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통상조치인지 통상법 301조에 따라 조사 실시(2019.7.10.)

구분		주요 내용
단기대책[1]		디지털 서비스 매출액(revenue)에 일정세율로 과세
장기대책[2]	pillar1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과세권 배분 규칙 도출 → 소비지국 과세권 강화
	pillar2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강화

주: 1) 장기대책 합의 시 시행 중단 예정 / 2) 법인의 소득(profit)에 대한 과세

○ 지난 2019.6월 G20회의에서 디지털세 장기대책 작업계획(program of work)을 결정함에 따라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세부적인 실무작업 진행 중

- 정부는 2020년까지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

※ 우리나라는 디지털세에 대한 세부 기술적 검토 등 디지털세 초안을 마련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주도 그룹(focus group)에 참여 중

통일부-시도지사협의회, 한반도 평화·번영 위한 협약문 체결

자료 : 통일부(2019.7.24.)

개요

○ [통일부 - 시도지사협의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문」 체결, 2019.7.24.]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2차 총회(2019.7.24.)에 참석해 17개 시·도지사와 통일부-시도협 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문」을 체결

※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협의체(회장: 박원순 서울시장)로서,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근거해 1999년 설립

- (의의) 통일부-지자체 간의 협력강화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관계 구축·발전방안을 담았다는 점

주요 내용

○ 통일부는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임을 협약에 명시하여, 지자체가 교류협력법상 협력사업 주체임을 명확화

정책동향

-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교류협력법') 하에서도 지자체는 협력사업의 주체※에 해당하며, 이번 협약문을 통해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근거를 분명하게 확인

  ※ (교류협력법 제2조)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활동"

  ※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향후 통일부는 지자체를 법률상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인정하는 교류협력법 개정안※(국회 계류 중)을 지원하고,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도 정비

※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활동(의원 개정안 외통위 계류 중)

○ 또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을 통한 지자체의 대북 연락·협의 등을 지원하고, 정부-지자체 간 공동 협력사업도 적극 발굴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및 「시도협」과 협력하여 「교류협력 지원 원스탑 서비스」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

- 지자체 등이 사업 준비단계부터 △방북·접촉 신청 등 절차 상담, △대북제재 면제 등 일련의 절차를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원스탑 센터를 개소할 예정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일부-지자체 간 정례 협의체를 강화하여 통일부-지자체-민간단체 간 소통과 협치를 확대하면서 포괄적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

〈협약문 주요 내용〉
◈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번영에 기여, 평화-번영 선순환 구조 마련
◈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지원) 지자체를 교류협력의 중요한 주체로 인식,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대북 연락·협의 지원, 공동 협력사업 발굴 추진
◈ (소통·협력 제도기반 조성)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실무협의회」 운영, 통일부-지자체-민간단체 간 포괄적 협력관계 발전, 통일교육·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협력사안 확대
◈ (공감대형성)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 및 시설 확충, 맞춤형 통일교육 실시, 사회적 대화와 분권·협치 기반 조성

○ [기대 효과] 이번 협약문은 평화·통일을 위한 중앙-지방 간 분권형 대북정책을 통해 신한반도 구현에 기여

○ [향후 계획] 교류협력의 중요한 주체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금지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대북 연락, 협력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

◈ 농업 · 농촌 동향

시험연구소-보건환경연구원 연구교류 협약(MOU) 체결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7.23.)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협약 체결, 2019.7.23.] 과학적인 농식품 안전·품질관리에 대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2019.7.23.)

- (주요 목적) 정부 핵심 가치 실현의 하나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업을 통해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사료 품질관리 등으로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

- (주요 협약 내용)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감시 등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검정법 공동연구와 정보공유, △소비자 보호 및 생산자 지원 등 농산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법 공유, △반려동물 등 사료 품질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사료 표준분석법 등에 대한 상호 교류, △시험·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사업 발굴 및 정보공유

- (기대 효과) 시험연구소의 우수한 과학적 분석법 연구개발 능력과 보건환경연구원의 뛰어난 분석 역량 간 상호협력※을 통하여 현장 활용의 효과가 극대화

  ※ (시험연구소) 국내 유일의 농식품 원산지검정·연구 업무 수행을 비롯하여 유해물질 분석법 및 사료 표준분석법 등 앞선 기술 개발에 노력해왔으며, (보건환경연구원) 풍부한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해 농식품 원산지검정법, 사료 분석방법 등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

'농촌 태양광 상담 콜센터' 구성 · 운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7.22.)

○ [농식품부, '농촌 태양광 상담 콜센터' 구성·운영, 2019.7.22.]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2019.7.22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촌 태양광 상담 콜센터」를 구성·운영

- (추진 배경) 최근 농촌 지역에 태양광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염해 간척지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심 있는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

정책동향

- (주요 내용) △조직··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14개 지역본부·사업단으로 구성※, △운영방식·· 정보안내를 위해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상담 실시, △주요 업무··태양광 사업에 관심 있는 농촌 주민 및 간척지 소유 농업인 등을 주요 대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의 지원반(061-338-6200, 6300)은 사업절차·인허가·사업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 상담,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사업단의 현장반은 콜센터 홍보 및 맞춤형 상담을 수행

  ※※ (일반 태양광발전 사업 유의사항 안내) 진입로 확보 및 일사량 확인, 한전계통 여부,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 (염해 간척 농지 태양광발전 사업 유의사항 안내) 설치 가능 규모, 허용 토양 염도, 일시사용허가 절차, 간척지 소유 농업인의 타인 사용허가 계약 시 유의사항 등

  ※※ (농촌 태양광 정부지원 사업 유의사항 안내) 대상별 지원 조건, 참여 방안, 사후관리 절차, 정부 지원 사업 등

- (향후 계획) 농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콜센터 운영을 통해 농촌 주민에게 태양광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태양광이 안정적으로 확산·보급되도록 추진할 계획

스마트 팜 연구개발(R&D) 워크숍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7.24.)

○ [농식품부·농촌진흥청, '스마트 팜 연구개발(R&D) 워크숍※' 개최, 2019.7.25.] '스마트 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점검과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부·청 공동 '스마트 팜 연구개발(R&D) 워크숍'을 개최

※ 주최/주관: 농식품부·농촌진흥청/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개최 목적) 이번 워크숍은 관련 기관, 학계, 기업, 농업인 등 '스마트 팜' 관련 전문가와 종사자 100명이 참석해 부·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팜'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민관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

  ※ 2019년 현황: 1세대 '스마트 팜' 연구사업(51개 과제, 250억 원), 사막형 '스마트 팜'사업(17개, 46억 원)

- (주요 내용) △부·청 공동 스마트팜 R&D 추진 배경, 경과, 과제 현황, 2020년 계획 공유, △R&D 협의체※ 구성·운영, 연구 추진현황 정보공유 및 협력방안 논의

  ※ 협의체: 기술고도화, 시설원예, 축산, 사막형스마트팜

농촌진흥청, 마이크로바이옴 미래대응 전략 수립

자료 : 농촌진흥청(2019.7.24.)

○ [농촌진흥청, '마이크로바이옴※ 심포지엄' 개최, 2019.7.24.] 「마이크로바이옴의 미래대응 전략 수립」이라는 주제로 '마이크로바이옴 심포지엄'을 개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서의 미래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기조강연※※, 분야별 초청강연※※※과 토론※※※※으로 진행

※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군집(마이크로바이오타: Microbiota)과 유전체(지놈: Genome)의 합성어로 주어진 환경에 서식하거나 또는 다른 생물과 공존하는 모든 '미생물의 총체적인 유전정보' 또는 '미생물군' 자체를 의미하는 말

※※ 서울대 천종식 교수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 및 산업적 동향'

※※※ (농식품 분야) '농식품 분야에서의 마이크로바이옴 투자와 연구개발 현황'에 대해 미생물 유전체전략 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김지현 교수가 발표

※※※ (환경 분야)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에 대해 '마이크로바이옴과 생태계 기능'을 주제로 고려대학교 박우준 교수의 발표와 함께 충북대 한남수 교수가 '식품이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

※※※ (축산 분야) '축산분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동향 및 방향'에 대해 부산대학교 김명후 교수가 발표

※※※※ (분야별 토론) 미생물, 식품, 축산, 정보구축의 4개 분과로 나누어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분야별 마이크로바이옴의 추진전략을 도출

- (개최 목적) 마이크로바이옴 국내·외 연구 동향 파악을 통한 미래대응 전략 수립 및 다부처 R&D 신규 사업 기획

※ 마이크로바이옴은 단일 미생물 활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식물의 치료, 고품질 식품 생산, 인체 건강 향상, 환경문제 해결 등 무한 잠재력을 가진 분야로 선진국에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기술적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향후 계획) 농촌진흥청은 농산업 전반에 걸친 농업의 디지털화와 함께 미생물의 과학적 이용과 관리에 대한 연구로 마이크로바이옴의 분석과 활용, 발효 종균 등 유용미생물 발굴과 이용, 동식물의 병원성미생물 제어기술 개발 등 연구를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

〈농업에서의 마이크로바이옴〉

- (작물생산 분야) 미생물농약·비료, 작물의 생육 증진 및 품질 향상, 기상재해 경감 등에 활용
- (식품 분야) 김치, 유산균, 장류, 발효주 등 발효식품 제조
- (축산 분야) 장내 건강증진 및 항생제 대체용 사료 첨가제, 축산악취 제거, 가축 분뇨처리 등에 활용
- 농업 관련 바이오에너지 생산, 각종 산업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미생물 유래 효소 등 다양한 활용 범위를 가지고 있음.

제22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7.25.)

○ [농식품부, 제22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개최※※, 2019.7.26.] 농생명소재 기술 및 산업 동향, 미래가치를 공유하고 발전방안 토론을 위해 '제22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이 2019.7.26일 「농생명소재※※※의 현재와 미래가치」이라는 주제로 개최

※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농림식품 분야의 과학기술 및 미래 유망산업 정보를 교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2014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그동안 기후변화, 친환경농업, 스마트농업, 곤충산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국내외 관련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옴.

※※ (주최/주관) 농식품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

※※※ 농생명소재: 농작물, 가축, 미생물 등 농업생명자원을 원료로 만든 식의약품, 화장품, 농자재 등 제품 및 재료를 의미하며, 최근 합성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천연 제품 선호 추세에 따라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

- (주요 내용)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생명소재 기술·산업 동향, 생명자원 관련 국제협약, 농생명소재 산업화 사례 등 4개 분야에 대한 전문가 주제발표가 진행되며, 농생명소재 기술 및 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 △의견수렴··농식품부에서 기획 중인 농생명소재 산업화 기술개발사업 등 농생명 분야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

No.	주제	발표자
발표 1	국내 농생명 바이오산업 동향 및 육성방안	판철호 센터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발표 2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국제동향 및 국내 대응방안	장영효 센터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발표 3	농생명자원 유래 고부가가치 화장품 및 식의약 소재 R&D사례	차재영 대표 (주식회사 유쎌)
발표 4	농생명소재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박치형 사무관 (농림축산식품부)
종합토론	농생명소재 기술 및 산업 발전 방안	좌장: 김지현 교수 (연세대학교)

- (향후 계획) 농생명소재를 이용한 제품개발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요를 다변화해 농가소득 안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미래성장포럼을 통해 유망 산업 및 기술을 탐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

정책동향

관세청-aT 농수산식품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양해각서 체결

자료 : 관세청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7.22.)

○ [관세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식품 수출 통관애로 해소 공동지원 업무협약(MOU) 체결, 2019.7.26.] 최근 농수산식품 수출 과정에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는 실정이나, 대부분이 중소업체인 수출업체 여건상 정보 부족 등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통관애로 해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

※ (주요 유형)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거나, 상대국 통관·검역 규정이나 절차를 몰라 통관 차질 발생

- (주요 협약 내용) △양 기관은 농수산식품 수출정보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필요한 통관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주요 수출국의 통관 모니터링을 통해 발굴된 통관애로 및 국제분쟁을 협력하여 해결할 예정

- (향후 계획)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수출 통관애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 식품 동향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19.7.23.)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9.7.23.] 수입자 스스로가 수입식품등의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한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2019.7.23일 행정예고

※ 수입식품등 검사명령: 부적합 반복 또는 위해 우려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자가 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현재 훈제건조어육 등 13품목 운영)

- (주요 취지) 이번 제정안은 그간 수입식품등 검사명령 절차가 기존 고시(「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국내 제조·가공식품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수입식품 특성에 맞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

- (주요 내용)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검사명령 지정 및 해제절차, △수입자의 검사명령 이행절차, △검사기관의 검사명령 부적합 제품의 보고절차 등

정책동향

- (향후 계획) 앞으로도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명령을 통관단계뿐만 아니라 해외 위해정보 등에 따른 유통 중 위해우려 식품에도 적용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

◈ 축산 동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7.23.)

❑ 개요

○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2019.7.23.] 현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2019.7.22.)

- (주요 목적) 그간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발생 시의 방역조치 사항 등을 반영하여 SOP를 개정안을 마련

  ※ 관계부처, 지자체 등 개정수요 조사(2019.5~6월), 농림축산검역본부, 학계 등 관계 전문가 검토회의(2019.6.25.), 관계부처·유관기관 최종의견수렴(2019.7.4.~7.11.)

- (주요 개정 내용) △국내 발생 시 남은음식물 이동제한 조치 근거 마련(제2장3조), △발생 시 살처분 범위 조정(제3장6조), △야생멧돼지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 마련(제3장20조), △도축장 및 동물원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 마련(제3장21조), △살처분 등 참여자 예방교육 및 심리지원 마련(제3장22조)

❑ 주요 개정내용

○ [국내 발생 시 남은음식물 이동제한 조치 근거 마련(제2장3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발생할 경우 남은음식물을 모든 돼지농장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명령※(이동제한명령) 조치 근거 마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2조에 따라 1종가축전염병이 발생 시 농식품부 장관(또는 농림식품검역본부장)의 긴급 조치(제19조에 따른 오염 우려 물품 이동제한) 가능

정책동향

○ [발생 시 살처분 범위 조정(제3장6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내(관리지역) 농장을 즉시 살처분※

※ 현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은 즉시 살처분하고, 500m 내 농장은 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군에서 살처분 결정

○ [야생멧돼지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 마련(제3장20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에서 발생 시 야생멧돼지 방역대 내 농장 예찰, 소독 및 통제초소 설치, 위험농장※ 예방적살처분※※ 등 조치사항 마련

※ 역학관련농장(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출입했던 농장 등) 등

※※ 벨기에는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에 따라 인근 감염 우려 농장을 예방적살처분

○ [도축장과 동물원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 마련(제3장21조)] 도축장에서 발생 시 도축장 폐쇄 및 소독조치, 계류 중인 가축 살처분 및 보관 중인 지육 폐기, 출하농장 추적·검사 등 조치사항 마련

※ 동물원에서 발생 시 동물원 개방 중단, 전시 중인 동물 매일 예찰, 소독 등

○ [살처분 등 참여자 예방교육 및 심리지원 마련(제3장22조)] 가축 살처분 투입 인력 등에 대한 예방교육과 심리지원 방법 마련※

※ 마음돌보기 건강안내서, 신체적·심리적 지원 체크리스트 마련

○ [그 밖에 보완사항]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담 가축방역관 지정(제3장3조), 유관부처의 방역 관련 임무와 역할 명확화(제3장5조), 일시이동중지 대상(가축 → 돼지) 및 발령권자, 시점 및 적용 범위 명확화(제1장, 제3장5조) 등※

※ 개정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향후 계획]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와 유입되더라도 조기 차단될 수 있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업무 추진과정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 국경검역 집중 홍보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7.25.)

○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 국경검역 집중 홍보기간 운영, 2019.7.25.]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여름휴가 성수기(2019.7.29.~8.10.)를 맞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여 해외 여행객 대상으로 매체 홍보, 현장 캠페인 등 추진

정책동향

- (매체) KBS 공익광고, KTX 객실 모니터, 공항리무진 버스 광고(2019.7~8월)

- (현장) 주요 국제 공항만(10개소) 일제 홍보캠페인※(2회/주)

  ※ (기존) 1~2회/월 → (강화) 매주 화, 목요일, (공항) 인천·김포·대구·청주·제주·무안, (항만) 인천·평택·부산·군산

- (기내) 공항공사·항공사 대상 입국 전 기내방송 철저※(요청)

  ※ 국내 입국 시 축산물 등 관련 제품 반입 금지(휴대하였을 경우 자진신고)와 미신고 시 과태료 엄정 부과 등 안내 강화

- (당부)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에서 축산물을 구입, 휴대하거나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

- (과태료 부과)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및 국경검역강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7.26.)

○ [농식품부,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및 국경검역강화, 2019.7.26.]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한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수입을 2019.7.26일부터 금지※

  ※ 동 조치는 슬로바키아가 2019.7.23일 뒷마당(backyard) 농장의 사육돼지 4마리 중 1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긴급 보고한 것에 따른 것

- (주요 내용) 슬로바키아는 이번 발생으로 해당농장의 사육돼지(4마리)를 살처분하고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한편 슬로바키아는 2006.8월 우리나라로 돼지고기 수입이 허용되었으나,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수입되지 않은 상황

  ※ 슬로바키아는 발생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현재 조사 중임.

  ※ 슬로바키아 돼지고기 수출작업장은 그간 수출실적이 없어 승인이 취소됨(2013.6월)

- (향후 계획 및 당부 사항) 농식품부는 슬로바키아 등 ASF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해외여행객에게 해외여행 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당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범위에 곤충 14종 포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7.25.)

○ [농식품부,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고시 개정·시행, 2019.7.25.~]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 곤충을 2019.7.25일부터 가축에 포함

- (추진 배경) 이전에 곤충 사육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에서 인정되었으나, 가축과 축산에 관하여 널리 적용하고 있는 「축산법」에는 가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른 법률의 적용 등에 일부 한계

- (주요 내용)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중 총 14종※,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의 경우 곤충사육시설이 축산시설로 적용받아 ① 사육시설 취득 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감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 ② 부지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 전용이 가능

※ 현재 생산·유통 중인 토종 곤충으로서 사육법이 개발되었고 생태환경에 위해 우려가 낮은 종을 우선 가축에 포함

◈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 식용(4): 갈색거저리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누에(유충, 번데기)
- 약용(1): 왕지네
- 사료용(2): 갈색거저리 유충, 건조귀뚜라미(왕귀뚜라미)
- 학습·애완용(8): 장수풍뎅이,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 화분매개※ 용(2):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 화분매개: 식물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꽃의 수술에 붙은 꽃가루를 실어나르며 암술머리에 옮겨 수분시킴.

★ 밑줄: 두 가지 용도로 활용되는 곤충

- (향후 계획) 이번 고시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아메리카동애등에'(환경정화용, 사료용) 등 외래 기원 곤충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고,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

하절기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 점검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19.7.23.)

○ [식품의약품안전처, 하절기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 점검※, 2019.7.23.] 여름철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 취급업체 총 5,218곳**을 **점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84곳**(점검 대상 업체의 3.5%)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19.6.3.일부터 6.24일까지 전국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축산물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

- **(주요 위반 내용)** △자체 위생관리사항 미준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4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교육 미이수(6곳), △표시사항 위반(6곳) 등※

※ 참고로 관할 지자체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

- **(향후 계획)**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 **(당부 사항)**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하절기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위생 점검 결과(단위: 개소) ▐

구분		점검 업체	위반 업체	위반율 (%)	위반내용				
					영업자 준수사항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사항 위반	위생교육 미이수	기타
계		5,218	184	3.5	54	34	6	6	84
축산물가공업	식육	328	19	5.8	7	3	1	1	7
	유	74	0	0	-	-	-	-	-
	알	34	0	0	-	-	-	-	-
식육포장처리업		1,288	41	3.2	22	11	-	2	6
축산물보관업		34	0	0	-	-	-	-	-
축산물운반업		66	0	0	-	-	-	-	-
축산물판매업	식육	2,097	72	3.4	16	11	3	2	40
	식육부산물전문	89	1	1.1	-	1	-	-	-
	우유	106	26	24.5	-	-	-	-	26
	식용란 수집	267	5	1.9	-	4	-	-	1
	유통전문	4	0	0	-	-	-	-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819	17	2.1	9	4	2	1	1
기타(물류센터 등)		12	3	25.0	-	-	-	-	3

2019년 상반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점검결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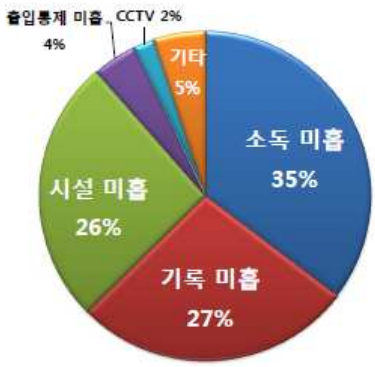
○ [농식품부, 2019년 상반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점검, 2019.7.24.]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7,560개소)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 중이며 그간 3,596개소※※(48%)를 점검한 결과, 393건의 방역 미흡 사례를 확인

※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지자체 점검반이 전국 500수 이상 가금농가와 도축장·사료공장·분뇨·비료업체 등 축산시설 현장점검 중

※※ 가금농가 2,703호(닭 2,157호, 오리 400호, 기타 146호), 축산시설 893개소(도축장, 사료공장, 분뇨·비료업체, GP센터, 전통시장 등)

▌2019년 상반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점검 중간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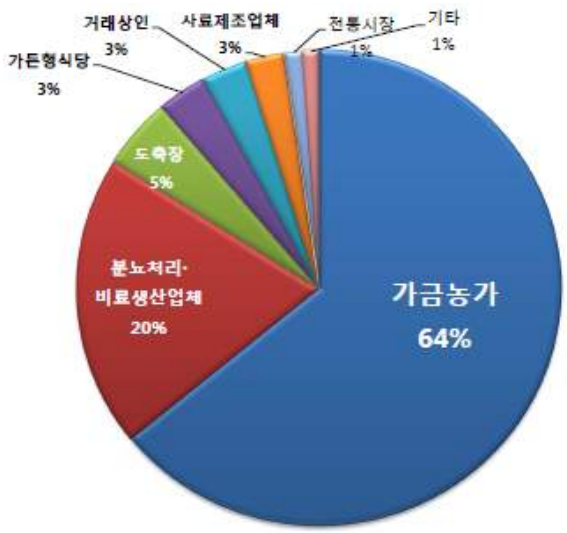
〈위반사례별〉



〈가금농가별〉



〈업종별〉



정책동향

- **(법령 위반)** 재입식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가금농가,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소독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축산시설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사례 총 9건**을 확인

  ※ 재입식 절차 등 방역기준 미준수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독 미실시 및 소독기록부 미작성은 50만 원 이하 과태료(도축장, 사료공장은 100만 원)

- **(현지 지도)** 소독제 사용·관리 미흡, 농가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설치·운용 미흡, 기록 관리 미흡, 축산차량 출입통제 미흡 등 일부 방역미흡 사례 **384건**에 대한 현지지도를 실시

- **(사례별)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 등 **소독 관리 미흡**이 **13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소독 등 기록 미흡이 107건(27%), 울타리·전실 등 방역시설 관리 미흡이 102건(26%)※

  ※ 이외 차량 등 출입통제 미흡 17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리 미흡 8건, 축산차량 관리 미흡 5건, 방역기자재 관리 미흡 등 기타 15건 확인

- **(업종별) 가금농가(252건, 64%)**와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78건, 20%)**에서 방역 미흡사례가 **많이 확인**되었으며, **가금농가 중**에는 **오리**와 **산란계 농가**의 **비중**이 **높아**

- **(향후 계획)**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하고, △**방역 미흡농가, 시설 재점검**,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10월~) **이전**에 **전국 가금농가·축산시설 전체 점검**을 마무리, △지적사항이 많았던 **소독 관리**를 **강화**하도록 가금농가와 축산시설별 소독제 사용수칙을 마련, △**교육·홍보**도 **강화**

- **(당부 사항)**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가금농가·축산시설**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 올바른 소독제 사용, 울타리·전실·그물망 정비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항상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

  ※ 2019.1.1일 이후 대만 55건, 중국 4건, 러시아 2건 발생

아젠다발굴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출범 등

[기획] 빅데이터 주요 동향 |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출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빅데이터 활용으로 소상공인 폐업률은 낮추고,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2019.7.23.) 보도자료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출범식 개최, 2019.7.22.] 2019.7.22일 데이터 생태계 조성과 혁신성장의 기반 마련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출범식 행사를 개최

◈ (빅데이터 플랫폼) 주요 분야별※로 센터 등에서 구축된 데이터를 한 공간으로 최대한 모아 시장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로 가공·분석 및 유통 체계 마련(10개소)

※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소비, 통신, 중소기업, 지역경제, 산림 분야

◈ (빅데이터 센터) 수요 기반의 활용가치가 높은 양질의 데이터를 기관별로 생산·구축하여 연계된 플랫폼을 통해 개방·공유 체계 마련(100개소)

◈ (빅데이터 네트워크) 민·관 협력을 통해 데이터 유통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플랫폼 간 연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 (추진 배경) △데이터의 축적·유통·활용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폐쇄적 유통구조, 산업·사회적 활용 저조 등 한계※ 노출, △각종 데이터가 유통되는 빅데이터 플랫폼과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여 기존 산업 발전과 新시장 창출 지원 필요

※ 국내 전체 사업체 빅데이터 이용률은 9.5%로 매우 낮음(2018, NIA).

- (주요 내용) △플랫폼 출범 비전 동영상 상영, 플랫폼 경과보고, △이벤트(조형물 터치버튼 등), 플랫폼별 착수보고, 전시부스 시연 등

❑ 주요 내용

○ 빅데이터 센터는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활용도 높은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구축하고, 플랫폼은 이를 수집·분석·유통하는 역할을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야별 플랫폼 10개소와 이와 연계된 기관별 센터 100개소를 구축하는데 3년간 총 1,51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019년에는 64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 빅데이터 플랫폼(240억 원=24억 원×10개소), 빅데이터 센터(400억 원=4억 원×100개소)

아젠다 발굴

- 지난 2019.3월부터 사업공모 절차를 거쳐 통신, 문화, 환경, 유통 등 **10개 빅데이터 플랫폼**※과 **72개 빅데이터 센터**를 **최종 선정**

  ※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소비, 통신, 중소기업, 지역경제, 산림 분야

- 현재는 1차 공모에서 선정된 72개 센터 외에 28개의 추가 센터 선정을 위한 2차 공모(2019.7.8.~8.8.)를 진행 중이며, 선정된 센터는 향후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될 예정

○ 2019년부터 향후 3년간 구축될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는 우리나라의 **낙후**된 **데이터 생태계**를 **혁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

- **(생산·구축)** 분야별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말까지 시장 수요**가 **높은 1,400여 종**의 **신규 데이터**를 **생산·구축**하고, 사업이 완료되는 **2021년까지 총 5,100여 종**의 **양질**의 **풍부**한 **데이터**를 **생산·구축**하여 **시장**에 **공급**할 계획

- **(개방·공유)** 센터와 플랫폼 간에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센터**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플랫폼**을 통해 **개방·공유**※하여 데이터의 **최신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

  ※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및 민감데이터 등은 현행 법체계을 고려하여 개방·공유

  ※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민간 등 기관별 특성, 현행 법체계 및 기존 기관의 인프라·운영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축

- **(융합·분석)** △100개 센터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분야별 플랫폼에서 융합하여 **가공·분석**하고, 이용 목적에 맞는 **맞춤형 데이터 제작** 등 **양질**의 **데이터**로 **재생산**하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다양한 **데이터 분석 도구**와 **인공지능**(AI) **학습 알고리즘** 등을 **제공**하고, △**일반인**도 데이터를 **쉽게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분석 환경**도 **제공**

- **(유통·활용) 데이터 등록 및 검증, 소재 통합검색, 품질 및 유통 사후관리, 유통 표준약관** 등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유통·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맞춤형 일자리 수요예측, 미세먼지 종합분석, 상권 및 소비 트렌드 분석** 등 **새로운 공익적, 산업적 서비스**를 국민과 기업들이 **폭넓게 체험**하고 **활용**

- **(거버넌스)**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부처 및 플랫폼 운영기관 등과 민·관 협의체인 **데이터 얼라이언스**를 **구성·운영**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 표준화, 유통 및 제도** 등 **다양**한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아젠다 발굴

○ 이어진 **빅데이터 플랫폼 착수보고**에서는 **각 플랫폼 운영기관**이 **플랫폼**과 **센터**의 **구축 방향**과 **성과 목표**를 **발표**

-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 △국내 카드업계 1위인 **BC카드**※가 **중심**이 되어 **보험, 증권, 통신** 등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7개 센터**와 **협업**하여 **소상공인 창업지도 서비스** 및 **국민 금융생활 플래너 서비스** 등 **제공**; △증권, 카드, 대출, 보험, 통신, 소셜, 상권, 유통 등 21TB 데이터 개방

  ※ 2,800만 명 카드 고객 및 304만 개 가맹점의 소비·결재 데이터 보유

  ◈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는 BC카드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 대상 중금리 대출이자를 2%p 절감하여 연간 1조 원의 신규대출 창출을 기대

-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국내 대표 물환경 전문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중심**이 되어 **생활환경**(대기, 화학물질) 및 **자연환경**(기상/기후, 지질/지형, 생태)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7개 센터**와 **협업**하여 **맞춤형 수질정보 서비스** 및 **대기질 야외활동 추천 서비스** 등 **제공**; △9개 환경분야 18개 기관의 146개 항목의 데이터 보유(179억 건, 43TB)

  ※ 우리나라 95%의 물 환경 데이터 보유(지표수/지하수, 상·하수도, 물재난)

  ◈ 환경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돗물 수질, 누수, 미세먼지 등 국민들이 실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환경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 △공공분야의 문화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중심**이 되어 **문화·체육·관광 데이터**를 **생산**하는 **8개 센터**와 **협업**하여 **문화여가 종합정보 서비스** 및 **한류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등 **제공**; △7개 문화체육관광분야 18개 기관의 240개 항목의 데이터 보유(50TB)

  ※ 139개 기관의 문화데이터 통합관리(문화체육관광부 66개/타부처 73개, 7,780만 건, 오픈API 303건)

  ◈ 문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국문화정보원은 개인 맞춤형 원스톱 문화·체육정보 제공을 통해 문화·예술 관람률을 81.5%(2018)에서 85%(2021)로, 생활체육 참여율을 62.2%(2018)에서 67.6%(2021)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계획

-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교통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3개**의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도로, 내비게이션, 유동인구, 주차** 등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7개 센터**와 **협업**해 **데이터 접근 혁신화, 데이터 유통혁신화, 혁신 성장 데이터 셋** 등의 **혁신 서비스 제공**; △차량, 교통, 철도, 내비게이션, 유동인구 등 데이터 생산(일 700GB)

  ※ 차량운행기록, 하이패스, 철도수송, 내비게이션, 유동인구 등 데이터 생산

  ◈ 교통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국교통연구원은 수개월이 걸렸던 데이터 제공시간을 수일 내로 단축하고, 미래 신 교통 분야에 접목 가능한 자율주행차, 공유차, 스마트시티 관련 3대 분야의 데이터셋을 제공할 계획

아젠다 발굴

-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국내 암 연구·진료 중추 기관인 **국립암센터**※가 **중심**이 되어 **10대**※※ **암종별 임상데이터**를 **생산**하는 **5개 센터**와 **협업**하여 **암 진단치료 의사 결정** 및 **항암 치료제 연구 개발** 등 **활용**; △국립암센터 등 6개 병원에서 39.4만 건의 10대 암종별 통합메타데이터 생산※※※(2019~2021)

  ※ 유방암, 폐암 등 총 10대 암종별 12만 명 임상데이터 보유(2016년 기준)

  ※※ 갑상선암, 신장암, 유방암, 대장암, 폐암, 난소암, 간암, 위암, 전립선암, 췌담도암

  ※※※ 민감정보인 의료정보의 특성을 고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데이터를 활용하며, 원본데이터는 외부에 제공 또는 판매하지 않는 등 제한적으로 활용

> ◈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는 국립암센터는 정확한 치료방법과 치료약 연구를 통해 암 환자 생존율을 5%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여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의 13%를 절감할 수 있을 것

- **(유통·소비 빅데이터 플랫폼)** △경제산업 전문 언론사인 **매일방송**※이 **중심**이 되어 **유통·물류·소비 데이터**를 **생산**하는 **6개 플랫폼 참여기업** 및 **10개 센터**와 **협업**하여 **라이프 스타일별 선호 외식업종 서비스** 및 **지역별 온라인 상품 구매정보 서비스** 등 **제공**; △유통·소비 분야 카드(1.5억 건/월), 택배(31.5억 건), 통신(2,700만 명) 데이터 보유

  ※ 2,500만 명의 경제·산업·소비 데이터 보유

> ◈ 유통·소비 플랫폼을 구축하는 매일방송은 융합데이터 기반 창업 컨설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폐업률 14%의 약 10%를 감소시킬 계획

- **(통신 빅데이터 플랫폼)** △국내 유무선 대표 통신사인 **KT**※가 **중심**이 되어 **공간, 생활, 소셜, 공공 데이터**를 **생산**하는 **11개 센터**와 **협업**하여 **유동인구 기반 상권분석 서비스 및 생활인구 분석 서비스** 등 **제공**; △통신, 공간, 생활, 소셜, 공공 등 218종 데이터(768TB) 보유

  ※ 유동·관광인구 등의 데이터 보유(720TB): 기존 120TB를 개방 중이었으나 이번 사업을 계기로 600TB 추가 개방

> ◈ 통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KT는 공간, 생활, 소셜 데이터와 5세대(5G) 서비스가 연계된 데이터를 개방하여 데이터 이용기업의 매출 5% 이상 향상시키고 대국민 생활 편익 10% 이상 개선하는데 기여할 계획

-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경영 정보화 및 클라우드 전문기업인 **더존비즈온**※이 **중심**이 되어 **일자리, 무역, 기업 신용** 등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8개 센터**와 **협업**하여 **기업 경영 정보 분석 서비스** 및 **일자리 수요예측 서비스** 등 **제공**; △회계·인사데이터 80종 116억 건, 약 320만 개 기업 데이터 보유(500TB)

  ※ 전체 기업(국세청전자신고대상기업)의 약 86%의 데이터를 보유

아젠다 발굴

◈ 중소기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더존비즈온은 기업 회계, 경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벤처기업 생존율을 27.8%에서 50%로 향상시키고, 부도율을 35.9%에서 15%로 감소시킬 것

-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국내 경제지표의 중심지인 경기도※에서 경기도청이 중심이 되어 경기 지역화폐를 매개로 생산·소비·일자리 데이터를 생산하는 5개 센터와 협업하여 지역 소비패턴 분석, 맞춤형 일자리 매칭서비스 등 제공; △104종 생산·소비·일자리 관련 데이터 보유(약 495억 건)

※ 경제활동인구 700만 명(전국 대비 25.5%), 총 사업체수 878,257개(전국 대비 21.8%)

◈ 지역경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경기도는 지역화폐, 기업, 일자리 데이터를 개방하여 83만 명의 소상공인과 지역기업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특히 2천만 건의 지역화폐 데이터를 활용하여 1.3조 원 규모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것

- (산림 빅데이터 플랫폼) △임업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트래킹, 산악기상, 생물종, 산림치유 등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7개 센터와 협업하여 위치기반의 트래킹 서비스 및 산림재해 예측 서비스 등 제공; △트래킹(1,700만 건), 산악기상(570만 건), 생물종 정보(5TB) 등 보유

◈ 산림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혁신 비즈니스를 창출하여 임산업 규모를 15% 성장(2018년: 35조 원 → 2021년: 40조 원)시킬 것

○ [향후 계획]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를 지렛대로 우리나라의 낙후된 데이터 생태계를 혁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규제 3법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요청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선정 현황(1차 공모) ▐

분야	수행기관	센터 구성	플랫폼 주요 내용
금융	비씨카드	7개 (노타, 닐슨코리아, 다음소프트, SBCN, 망고플레이트, 해빗팩토리, KT)	• 금융(대출, 보험, 증권), 비금융(통신, 소셜, 유통, 미디어, 상권) 데이터를 융합하여 소상공인 창업 지도 서비스 및 국민 금융생활 플래너 서비스 등 제공
환경	한국수자원공사	7개 (기상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GDS컨설팅그룹, 그린에코스, 아이렉스넷)	• 물, 기상·기후, 미세먼지, 지질·재해, 생태·자원, 화학·물질, 환경SNS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맞춤형 수질정보 서비스 및 대기질 야외 활동 추천 서비스 등 제공

아젠다 발굴

분야	수행기관	센터 구성	플랫폼 주요 내용
문화	한국문화정보원	8개 (국립중앙도서관,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예술위원회, 야놀자, 청소년활동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레드테이블, 레드타이)	• 문화, 숙박, 레저, 음식, 상권, 도서 · 출판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문화여가 종합정보 서비스 및 한류 비즈니스 매칭서비스 등 제공
교통	한국교통연구원	7개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포항테크노파크, 아이나비시스템즈, SK텔레콤, KT, KST플레이스, 코리아크레딧뷰로)	• 실시간 교통량, 대중교통, 열차, 고속도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유동인구, 주차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도로 및 대중교통 개선 서비스 및 스마트 시티 지원 서비스 등 제공
헬스케어	국립암센터	5개 (삼성서울병원, 연대 세브란스병원, 건양대병원, 전북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 10대 암종별 임상데이터를 융합하여 암 진단 · 치료 의사 결정 및 항암 치료제 연구개발 등 활용
유통소비	매일방송	10개 (나이스디앤알, 다음소프트, 데이블, 로플랫, 빌트온, 식신, 온누리에이치엔씨, 지인플러스,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우편사업진흥원)	• 유통상품, 카드결재, 택배송장, 통신, 부동산, 상권, 물류, 맛집, 중고차시세, SNS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라이프 스타일별 선호 외식 업종 서비스 및 지역별 온라인 상품 구매정보 서비스 등 제공
통신	케이티	11개 (비씨카드, 인터넷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 소상공인연합회, 경기대, 어메이징푸드솔루션, 두잉랩, 코난테크놀로지, 오픈메이트, 넥스트이지, 네스)	• 유통인구, 상권, 카드소비, 관광, 교통카드 정보, SNS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상권분석 서비스 및 생활인구 분석 서비스 등 제공
중소기업	더존비즈온	8개 (빅밸류, 한화손해보험,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무역정보통신, 와이즈넛, NICE평가정보, 산업기술진흥협회, 인크루트)	• 중소기업 회계정보, 부동산, 보험계약, 기업 고용 · 복리후생, SNS 등이 데이터를 융합하여 기업 경영정보 분석 서비스 및 일자리 수요예측 서비스 등 제공
지역경제	경기도청	5개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일자리재단, 더아이엠씨,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기업데이터)	• 지역화폐 결제정보, 기업정보, 일자리, 신용평가, 카드사정보, 경기도 인구 · 주거 · 환경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지역 소비패턴 분석 서비스 및 맞춤형 일자리 매칭 서비스 등 제공
산림	한국임업진흥원	7개 (비글, 아로정보기술, 인포보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시선아이티, 우림엔알, 삼아항업)	• 임업, 등산로 · 숲길 · 자전거, 대중교통, 산악기상, 산림재해, 항공영상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트래킹 서비스 및 산림재해 예측 서비스 등 제공

※ 중복 참여 기관을 제외하면 총 72개 센터

아젠다 발굴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위험관리

※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USDA ERS)가 발표한 "Climate Change and Agricultural Risk Management Into the 21st Century" (2018.7.)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위험관리

○ 현재 연방정부는 **시장 가격 및 생산량 변동**에 따른 **경종 농가**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연방 작물 보험프로그램**※(Federal Crop Insurance Program:FCIP), **가격손실보상**※※(Price Loss Coverage:PLC) 제도와 **농업수입보상**※※※(Agricultural Risk Coverage: ARC)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연방 작물보험프로그램: 작물 재배 농가가 민간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어 자연재해의 경우 평년작의 50, 65, 75%의 수확 또는 현금수입을 보장받고 정부는 민간 보험회사의 손실과 비용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임.

※※ 가격손실보상 제도(PLC): 시장가격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임.

※※※ 농업수입보상(ARC): 단위면적당 수입이 기준수입의 86%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지불받게 됨.

- 지난 **10년간** 이러한 프로그램에 **투입**된 **비용**은 **약 120억 달러**에 달하며, **기상 변화**에 따라 매년 **투입금액**은 **큰 차이**를 보임.

○ **기상 변화 시 주요 작물들**의 **단수, 생산량,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기상 상황별**로 **피해액**을 **계측**함. **해외 공급 및 수요**는 피해액을 가중 또는 경감시킬 수 있으므로 **시나리오**에서 **배제**됨.

- **온난화 시나리오**는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보다 감소**하는 경우와 **증가**하는 **경우**로 **구분**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소 시나리오**의 경우 **FCIP 프로그램 비용**은 **현재보다 3.5% 증가**에 그친 반면, **온실가스 증가 시나리오**는 FCIP 프로그램 비용이 **2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위 시나리오는 **기후 변화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진 경우**를 **가정**한 경우임. 만약 기후 변화에 대한 **준비**가 **미비**된 경우 **FCIP 프로그램 비용**은 시나리오에 따라 현재보다 **10~3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노딜 브렉시트가 영국 농식품 분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영국 하원(House of Commons)이 발표한 연구보고서 "The consequences of No Deal for UK Business" (2019.7.19.) 4장 "Food and farming" 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노딜 브렉시트가 영국 농식품 분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농식품 관세] 관세 부문 영국-유럽연합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농식품 품목은 거의 없음. 따라서 노딜(no-deal) 브렉시트는 영국의 유럽연합 시장 접근성을 제한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농식품의 영국 시장 진입은 지속될 것임.

- 예를 들어, 영국에서 생산하는 양고기의 30%가 수출되며, 유럽연합이 전체 수출량 중에서 95%를 차지하고 있음.

- 현재 유럽연합은 영국산 양고기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노딜 브렉시트 하에서는 관세율이 50%까지 올라※ 갈 수 있음. 동시에 현재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는 뉴질랜드산 양고기 수입량은 계속 증가할 것임.
  ※ 모델을 통해 추산해본 결과 관세율이 50%까지 올라가는 경우 영국 내 양고기 가격은 3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농식품 공급] 노딜 브렉시트로 각종 세관 절차와 위생 검역을 실시할 경우 도버 해협※을 통해 영국으로 수입되는 농식품이 줄어든다면, 농식품의 부분적인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영국으로 수입되는 농식품의 40%는 도버 해협을 통해 들어오고 있음.

- 영국은 10월 추수 이후 신선 식품의 부족이 나타날 수 있음.

-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가공한 자국산 닭고기를 재수입하는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음. 또한, 분유, 밀 생산량도 자국 수요를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보임.

○ [농식품 가격] 농식품 공급 부족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임.

- 특히, 신선 식품의 경우 급속한 가격 상승을 경험할 수 있으며, 도버 해협을 통하지 않고 스페인에서 우회하는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 유통비용이 증가할 것임.

○ [위생·안전]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과 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의 관할권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정부는 영국 내 식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체 조항을 신속히 수립해야 함.

아젠다 발굴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2019년 가공식품 마케팅 시장 분석

※ 일본 농업협동조합신문 「国内加工食品市場23年に22兆9422億円に　富士経済が予測」(2019.7.22.)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 가공식품 마케팅 시장 분석

○ (주)후지경제는 2019년 7월 11일, 27가지 카테고리의 41개 품목에 대한 국내 가공 식품시장 조사 결과를 분석한 '2019년 식품 마케팅 시장조사 분석'을 발표하였음.

- 조사결과에 의하면 2023년 일본 국내 가공식품 시장은 22조 9,422억 엔(2017년 대비 1.4% 증가), 냉동식품 시장은 1조 7,298억 엔(2017년 대비 7.3% 증가)으로 전망됨.

○ 일본 국내 가공식품 시장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도 소비세 인상, 미국과 중국 무역 마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소비자는 가격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함. 또한, 2020년 이후 인바운드 수요※와 도쿄올림픽 특수가 일단락하는 등 불안요소가 있음.

※ 일본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수요, 인바운드 소비라고 부르기도 함.

- 향후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소비량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움. 기업은 '개별 식품 수요'에 맞춘 소용량의 상품을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강조한 상품 도입, 사용자의 편리성과 간편성 향상을 도모하여 단가 향상을 추진하고 있음. 시장 성장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음료, 알코올음료, 주식(냉동 면, 냉동 쌀밥, 즉석밥 등 주식·기본 식품), 조미료·조미식품이 가공식품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음. 주식, 디저트, 국물류의 구성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알코올음료와 농산가공품, 수산가공품 등은 구성비가 감소하고 있음.

- 주목할 만한 움직임으로는 고령자 중 건강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를 위한 저염, 저당질·저칼로리, 비타민 및 칼슘 등 영양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된 상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TV 방송에서 언급된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는 확대되고 있음.

- 롱셀러 브랜드는 신규 소비자 획득에 주력하고 있음. 특히 젊은 층 소비자 확보를 통해 장기적인 시장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움직임을 보일 전망임.

○ 세대 수 감소와 여성의 사회 진출 등에 의한 혼밥 문화 확대, 조리시간 단축 수요증가에 따라 냉동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품질 저하가 적고 장기보관이 가능하여 일반 소비자는 비상용 식품으로, 업소에서는 조리 간략화를 위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아젠다 발굴

- 냉동식품 시장에서는 즉석식품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냉동 돈가스 및 냉동 닭튀김, 냉동 수산물 튀김 등 튀김류의 시장규모 확대가 크게 나타남. 튀김류는 조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여 업소용 수요가 높음. 또한, 가정에서 간편 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냉동 쌀밥류 및 냉동 만두 등 냉동식품을 활용한 간편식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

- 면류는 시장규모가 큰 냉동 파스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냉동 중화면, 라면, 짬뽕을 중심으로 2017년-2018년에 수요가 크게 증가한 바 있음.

- 디저트 부분에서는 아이스크림류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특히 편의점에서 고단가 상품 취급을 늘리고 있어 시장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음.

- 농산물은 냉동 채소와 냉동 과일(시장 판매용) 모두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 기후의 영향으로 채소 공급 불안정이 대두되면서 상대적으로 공급 안정성이 뛰어난 냉동 채소 수요가 크게 성장하고 있음.

언론 동향 북한, 쌀 5만 톤 지원 거부

※ 아젠다 발굴을 위해 주요 일간지와 농업전문지에 기고된 내용을 근거로 농업·농촌 관련 쟁점 및 이슈, 주요 농정현안에 대응하고자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북한, 쌀 5만 톤 지원 거부

○ 북한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한미 연합군사훈련(2019.8월 예정)을 이유로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수령 거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 앞서 정부는 북한이 심각한 식량 부족 상태라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내산 쌀 5만 톤을 WFP를 통해 북측에 지원하기 위해 WFP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옴.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_2019.6.24._정책동향 및 언론동향 참고)

○ 정부 차원에서 대북 식량 지원을 하면서 남북 당국 간 협의 과정에서 무산된 사례는 있었지만 북한이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을 거부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북미실무협상 개최 준비라는 특수한 시점이 식량지원 관련 입장과 연계돼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이 제기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2019년 7월 16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판문점 조미 수뇌상봉을 계기로 조미 사이 실무협상이 일정에 오르고 있는 때에 미국은 최고위급에서 한 공약을 어기고 남조선과 합동군사연습 '동맹 19-2'를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며 "만일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조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언급

아젠다 발굴

❍ 통일부는 2019년 7월 24일 북측이 2019년 8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문제 삼으며 남측 쌀 지원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것과 관련해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과 실무협의※ 하는 과정에서 북한 내부에 이러한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WFP를 통해 북측 공식 입장을 확인 중"이라고 밝혀

※ WFP 평양사무소는 카운터파트인 북한 외무성 담당자와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측 의견을 들었으며 이를 통일부에 전달한 상황

- 통일부는 북측에 공식 입장을 요구했고, 정확한 입장이 확인되기 전까지 쌀 지원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현재로서는 "최종적인 북측 입장은 더 확인해 봐야 하며, 쌀 지원이 당초 계획대로 2019년 9월까지 5만 톤이 다 전달될 수 있도록 북측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부연 설명

자료: "'북한, 쌀 5만 톤 수령 거부'…한미 훈련 문제 삼는 이유는?"(KBS, 2019.7.24.), "北, 한미연합훈련 이유로 '쌀 5만 톤 지원' 거부 의사"(SBS, 2019.7.24.), "[단독] 한·미 연합훈련 이유로…남한 쌀 5만톤, 북 "안 받겠다"(경향신문, 2019.7.24.), "北, 쌀 5만t 지원 돌연 거부 움직임"(동아일보, 2019.7.24.), "北 "쌀 5만t 지원 안받겠다"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한듯"(매일경제, 2019.7.24.), "北, "한미훈련으로 南 쌀 안 받겠다"…정부 "공식입장 확인중"(상보)"(머니투데이, 2019.7.24.), "국제기구 통해서도 남한 쌀은 안 받겠다는 北…전례찾기 힘들어"(아시아경제, 2019.7.24.), "통일부 "대북 쌀 지원, 북한 내 거부 입장 있어""(아시아투데이, 2019.7.24.), "北, "한미훈련에 南쌀지원 돌연 거부"…정부 "공식입장 확인 중"(종합)"(연합뉴스, 2019.7.24.), "'한미 훈련' 이유로 "남한 쌀 안 받겠다"는 북한"(한국일보, 2019.7.24.), "北, 한미연합훈련 빌미 南 쌀 지원 거부 입장 표명"(헤럴드경제, 2019.7.24.)

통계·조사 2018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7.23.)

개요

○ [농림축산검역본부, 2018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9.7.23.]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18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를 발표

※ 2018년 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의 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동물영업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보호·복지 실태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함.

조사 결과

1. 동물등록 현황

○ 반려견은 「동물보호법」 상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47조(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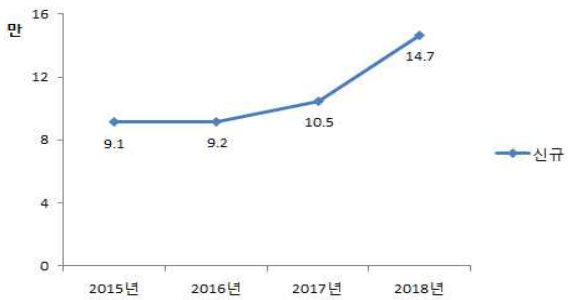
○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는 대행기관은 총 3,498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92.8%가 동물병원인 것으로 조사

※ (2018년: 3,498개소) 동물병원 3,245, 동물보호센터 141, 판매업소 108, 동물보호단체 4

※ (2017년: 3,483개소) 동물병원 3,173, 동물보호센터 164, 판매업소 142, 동물보호단체 4

○ 2018년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14만 6,617마리로 전년 대비 39.8% 증가하였으며, 2018년까지 등록된 반려견의 총 숫자는 130만 4,077마리로 조사

▌반려견 신규등록 현황(마리)▐



- (동물등록제) 2008년 시범 도입 이후 2014년 전국으로 시행되었으며, 2015년 이후 신규 등록 마리수※는 매년 증가

  ※ 신규등록 반려견(마리, 증가율): (2015) 91,232 → (2016) 91,590(0.4%) → (2017) 104,809(14.4%) → (2018) 146,617(39.8%)

- (지역별) 경기도(46,183마리, 31.5%) > 서울(30,560마리, 20.8% > 인천(9,297마리, 6.3%) 순

- (동물등록번호)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 등록인식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반려견 소유자의 61%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

  ※ 내장형 89,482마리(2017년: 70,777), 외장형 40,657(2017년: 27,005), 인식표 16,478(2017년: 7,027)

2.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현황

❍ 2018년 기준으로 전국의 동물보호센터는 298개소이며, 2018년 12만 1,077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을 구조·보호 조치하였으며, 운영비용은 200억 4천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

- (동물보호센터 운영 형태별) 민간위탁(위탁보호)(255개소) > 지자체(시·군) 직영(31개소) > 시설위탁(12개소)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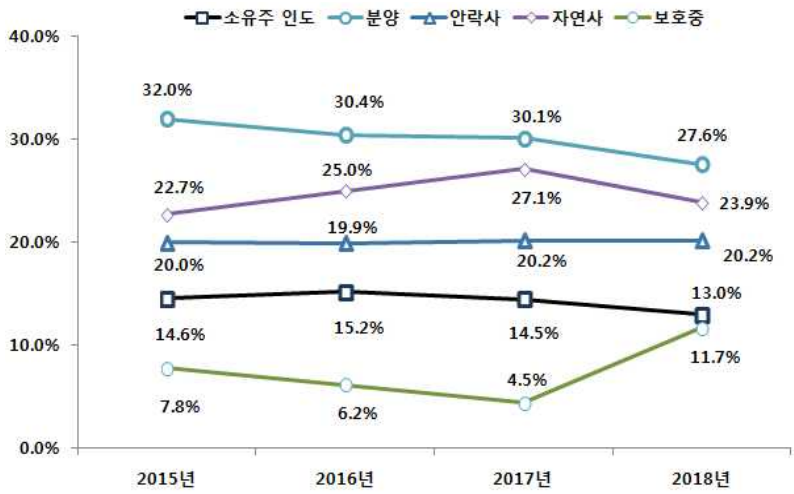
- (운영비용※)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비용을 포함한 운영비용은 전년 대비 28.9% 증가

  ※ 운영비용(억 원): (2015) 97.5 → (2016) 114.8 → (2017) 155.5 → (2018) 200.4

- (구조·보호 유기·유실 동물) 12만 1,077마리※로 전년 대비 18.0% 증가하였으며, 개 75.8%, 고양이 23.2%, 기타 1.0%로 조사

  ※ 유실·유기동물 구조현황: (2015) 82,082마리 → (2016) 89,732 → (2017) 102,593 → (2018) 121,077

▌연도별 동물보호센터 유실·유기동물 주요 보호형태 현황▐



- (구조된 유기·유실동물 보호형태별) 분양(27.6%) > 자연사(23.9%) > 안락사(20.2%) > 소유주 인도(13.0%) > 보호 중(11.7%) 순이며, 보호 중인 동물의 비율은 전년 4.7%에서 11.7%로 증가

3. 길고양이 중성화(TNR) 지원 사업

○ 2018년 길고양이 중성화(TNR) 지원 사업을 통해 길고양이 5만 2,178마리를 중성화하였으며, 67억 9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

- 중성화 지원사업 대상 길고양이는 전년 대비 37.1% 증가하였으며, 비용은 41.5% 증가※
  - ※ 중성화대상(마리): (2015) 26,306 → (2016) 33,313 → (2017) 38,059 → (2018) 52,178
  - ※ 운영비용(억 원): (2015) 31.4 → (2016) 42.9 → (2017) 48.0 → (2018) 67.9

4. 동물 관련 영업 현황

○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8개 업종, 총 1만 3,491개소이고, 종사자는 약 1만 6,609명으로 조사
  - ※ 「동물보호법」 개정(2017.3월)으로 동물 관련 영업이 4개 업종(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외에 2018년부터 4개 업종(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이 추가되어 8개 업종이 됨.

- (업종별) 동물미용업(35.0%) > 동물판매업(30.1%) > 동물위탁관리업(20.3%) > 동물생산업(8.8%) 순

- (업종별 종사자 비율) 동물미용업(32.0%) > 동물판매업(29.5%) > 동물위탁관리업(22.0%) > 동물생산업(10.3%) 순

5.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등 운영 현황

○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은 375명으로, 54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 (주요위반 행위※) 반려동물 소유자의 목줄, 인식표 미착용 등 위반(51.7%), 반려견 미등록(23.9%), 반려동물 관련 미등록 영업(10.8%) 등
  - ※ 반려견을 동물 등록하지 않거나, 외출 시 목줄·인식표 미착용 등 관리사항을 위반한 경우와 유기한 경우 등은 과태료 처분 대상(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며, 미등록 영업 등을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게 됨.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위원은 351명으로 전년 대비 19.0% 증가하였고, 교육·홍보 및 감시원 업무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활동실적은 3,390건으로 전년 대비 176.5% 증가

○ [향후 계획]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자체 및 동물보호단체, 관계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

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의 특징

자료 : 고용노동부(2019.7.25.)

❑ 고용 동향

○ 2019년 상반기 취업자(26,858천 명)는 전년 동기 대비 207천 명 증가※하며, 지난해 고용부진으로부터 벗어나 완만한 개선세

※ 취업자 증감(반기, 천명): (2018.상) 142 → (하) 53→ (2019.상) 207

- (고용률) 2019년 상반기 고용률(15~64세)은 66.5%※로 작년 상반기에 이어 통계 작성(1999.6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

※ 고용률(반기, %): (2017.상) 66.3 → (하) 66.9 → (2018.상) 66.5 → (하) 66.8 → (2019.상) 66.5

○ 2019년 상반기 경제활동참가율(63.2%)도 통계기준 변경(1999.6월) 후 최대로서,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며 취업자, 실업자 동반 증가

- (실업) 2019년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은 20만 명을 상회하며, 실업자수(1,209천명) 및 실업률(4.3%)도 증가※(각각 +66천 명, 0.2%p)

※ 실업자수(반기, 천 명): (2017.상) 1,118 → (하) 928 → (2018.상) 1,143 → (하) 1,004 → (2019.상) 1,209

※ 실업률(반기, %): (2017.상) 4.0→ (하) 3.3→ (2018.상) 4.1→ (하) 3.6 → (2019.상) 4.3

-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경활인구 증가폭이 확대되고, 비경활인구는 큰 폭 둔화※

※ 경활인구 증감(반기, 천 명): (2018.상) 167 → (하) 128 → (2019.상) 273

※ 비경제활동인구 증감(반기, 천 명): (2018.상) 89 → (하)119 → (2019.상) 31

※ 경제활동참가율(반기, %): (2017.상) 63.0→ (하) 63.3 → (2018.상) 63.0 → (하) 63.3 → (2019.상) 63.2

○ '상용직' 증가세('19상, +341천 명)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청년층', '여성', '신중년' 일자리 개선도 지속

- (상용직)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상용직 비중(2019상, 69.5%)은 통계 작성(1989.6월) 이래 최대 수준

- (여성)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해지며 고용률은 견조한 증가세, 2019년 상반기 여성 취업자 증가(+164천 명)가 전체 고용(+207천 명) 증가를 견인, 여성 고용률(57.4%), 경참율(59.8%)은 통계 작성(1999.6월) 이래 최고 수준

- (청년층) 고용률이 1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상반기 고용률은 43.1%로 2007년(43.4%)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40대) 제조업 경기 부진 및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핵심근로계층인 40대의 어려움이 지속※
  ※ 40대 인구 증감(반기, 천 명): (2018.상) △91 → (하) △116→ (2019.상) △148
  ※ 40대 취업자 증감(반기, 천 명): (2018.상) △93 → (하) △141→ (2019.상) △168

- (신중년) 신중년(50-69세)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여 증가세 지속, 베이비부머 등 인구 증가(2019상, +427천 명), 직접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2019년 상반기 신중년 취업자는 295천 명 증가※
  ※ 신중년 취업자 증감(반기, 천 명): (2018.상) 233 → (하) 180→ (2019.상) 295

- (취업시간별) 취업자 증가(2019.상, +20.7만 명)와 함께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증가(+36.9만 명),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감소(△13.9만 명). 1-17시간 취업자는 꾸준히 증가(+26.8만 명)

○ [서비스업] 보건복지업, 신산업 분야(정보통신, 전문과학) 등 '서비스업' (2019.상, +267천 명) 고용 개선※이 상반기 취업자 증가에 기여
  ※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반기, 천 명): (2018.상) 72→ (하) 31→ (2019.상) 267
  ※ ↳ 보건복지업 취업자 증감(반기, 천 명): (2018.상) 99→ (하) 151→ (2019.상) 161
  ※ ↳ 정보통신·전문과학 취업자 증감(반기, 천 명): (2018.상) 21→ (하) 97→ (2019.상) 104

○ [제조업] 다만, 우리경제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어려움은 지속, 수출투자 부진,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수는 15개월 연속 감소※(전자부품·전기장비 제조, 40대, 남성, 임시직 중심)
  ※ 제조업 취업자 증감(반기, 천 명): (2018.상) △23→ (하) △89→ (2019.상)△103

❑ 임금, 근로조건 등 근로조건 변화

○ [임금] 2019.1~4월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총액은 3.2% 증가하였으며, 300인 미만 사업체는 4.4% 증가, 300인 이상은 1.3% 감소※
  ※ 300인 이상 임금감소는 2018년의 임금협상 타결 소급분 지급 등에 따른 기저효과와 일부 전문서비스업 등 특별급여가 감소에 기인

-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으로 소규모 사업장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하면서,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완화
  ※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의 일시적인 큰 폭 증가를 고려하여 3년간 변화를 봐도 소규모 사업장이 임금이 크게 상승

○ [근로시간] 2019.1~4월 평균 월간 근로시간은 3.0시간(-1.8%) 감소하였으며, 300인 미만은 3.3시간(-2.0%) 감소, 300인 이상은 1.7시간(-1.0%) 감소

통계·조사

- 주 52시간 제도 영향 등으로 300 이상 사업체 중 초과근로시간이 많은 산업의 초과근로시간은 큰 폭의 감소세※가 뚜렷

※ 52시간 제도를 적용받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수가 많지 않아, 전체산업 및 산업 대분류 수준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 [미스매치] 대·중소 규모 사업체 모두 미충원률과 인력부족률이 감소※

※ 2019.1분기 미충원률 증감(%p): (5인 이상) -1.5, (5~299인) -1.5, (300인 이상) -1.6

※ 2019.4월 인력부족률 증감(%p): (5인 이상) -0.5, (5~299인) -0.6, (300인 이상) -0.2

○ [임금분배] 임금 5분위 배율과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015년 이후 지속 개선되어 2018년에는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개선

-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처음으로 20% 미만 기록(2018년 19.0%),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저분위의 임금이 개선되면서 성, 학력, 규모, 고용형태별 격차 모두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 [고용보험] 2019년 상반기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534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7천 명 증가※하여 2018년 상반기부터 증가폭 확대 지속

※ 반기별 가입자 증감(천 명): (2017.상) 320 → (하) 292 → (2018.상) 305 → (하) 411 → (2019.상) 517

※ 월별로는 2019.3월 이후 4개월 연속 50만 명대 증가폭 기록

-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구조조정 영향 감소로 '기타운송장비' (조선업) 제조업이 개선되면서 증가 지속※

※ 제조업 가입자 증감(천 명): (2017.상) -0.2 → (2017.하) 0.6 → (2018.상) 1.0 → (2018.하) 5.9 → (2019.상) 5.0

※ ㄴ 식료품 가입자 증감(천 명): (2017.상) 10.6 → (하) 7.6 → (2018.상) 9.1 → (하) 13.1 → (2019.상) 12.4

※ ㄴ 기타운송장비 가입자 증감(천 명): (2017.상) -41.1 → (하) -42.2 → (2018.상) -30.8 → (하) -12.3 → (2019.상) 0.7

- (서비스업) 대부분 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행정', '보건복지'는 직접일자리 사업 확대, 직접고용 등 영향으로 큰 폭으로 증가※

※ 서비스업 가입자 증감(천 명): (2017.상) 303 → (하) 275 → (2018.상) 291 → (하) 390 → (2019.상) 493

통계·조사

❍ [증가 원인]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와 함께 고용보험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 및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 강화에 따른 영향

- (30인 미만) 2018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 두루누리 지원 확대※※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청년지원정책 등으로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 대폭 확대

  ※ 30인 미만 가입자 증감(천 명): (2017.상) 191 → (하) 143 → (2018.상) 140 → (하) 218 → (2019.상) 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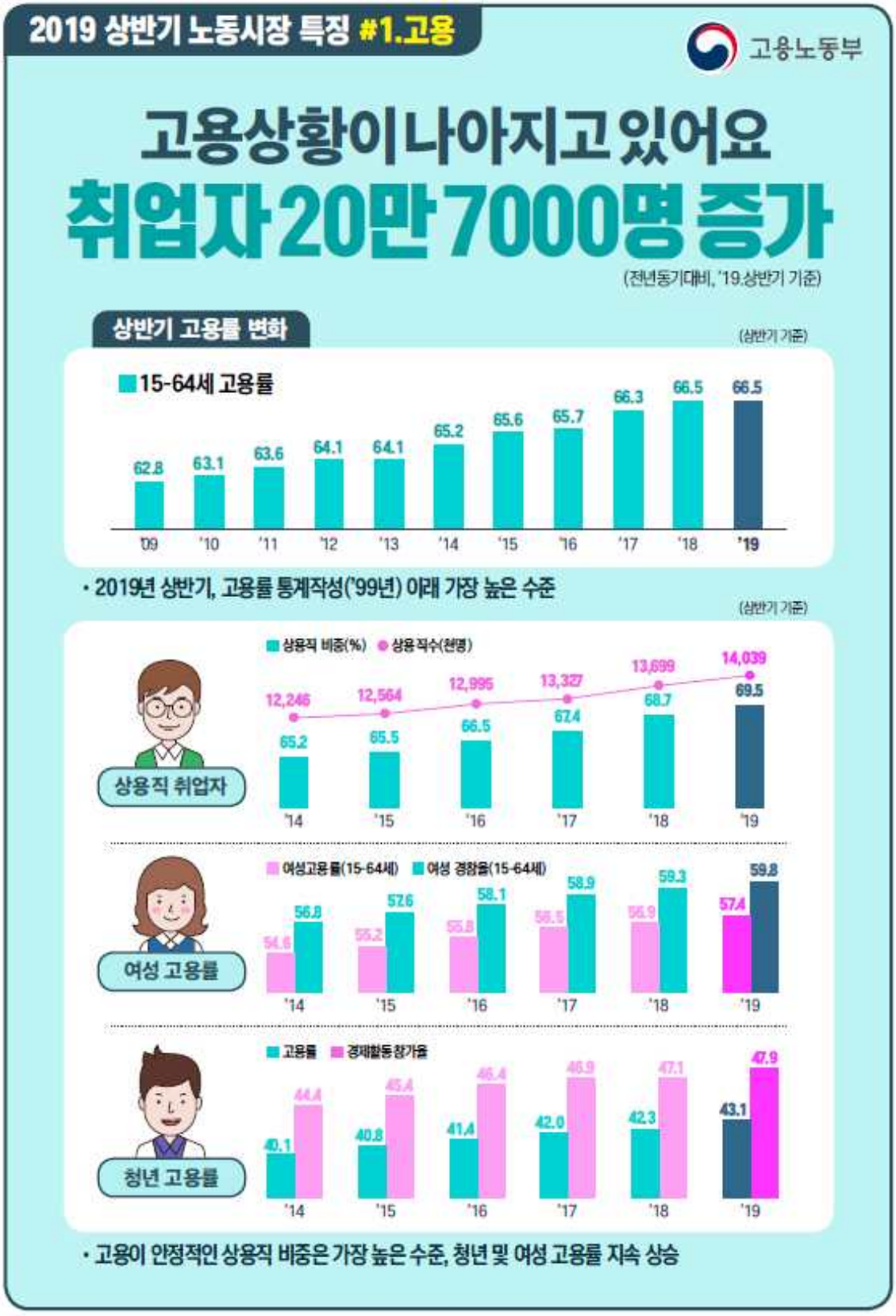
  ※ 30인 미만 사업장 193만 개 중 약 37%인 71만 개 사업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 두루누리 사업 확대: (2017년) [140만 원 미만] 5,202억 원 → (2018년) [190만 원 미만] 8,931억 원 → (2019년) [210만 원 이하] 1조 3,419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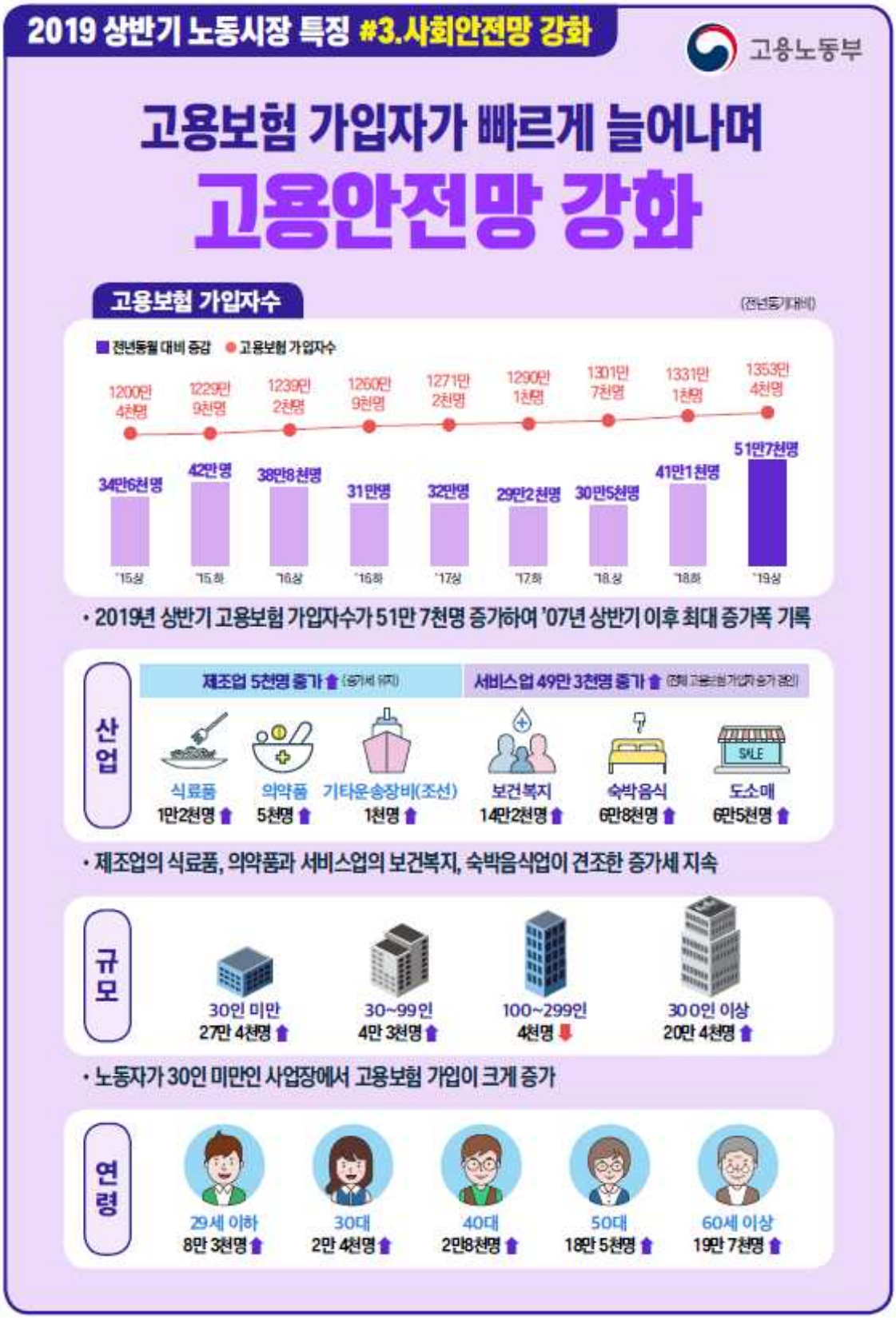
- (신중년) 고용보험 가입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382천 명 증가하며 신중년 고용안전망 강화, 고령층 여성 가입자 증가는 ① 15시간 미만 적용 확대※, ② 직접 일자리 조기·확대 시행, ③ 65세 이상 고용보험 자격유지 요건 완화※※ 영향

  ※ 주15시간(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중 "생계목적의 근로" 요건을 삭제

  ※※ 65세 이후 고용시 동일 사업주에게 계속 고용된 경우만 실업급여를 적용하였으나, 65세 이전부터 실제 계속 근로한 경우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2019 상반기 노동시장 특징 #1.고용
고용노동부
고용상황이 나아지고 있어요
취업자 20만 7000명 증가
(전년동기대비, '19.상반기 기준)
상반기 고용률 변화
(상반기 기준)
15-64세 고용률
62.8
63.1
63.6
64.1
64.1
65.2
65.6
65.7
66.3
66.5
66.5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019년 상반기, 고용률 통계작성('9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
(상반기 기준)
상용직 취업자
상용직 비중(%)
상용 직수(천명)
12,246
12,564
12,995
13,327
13,699
14,039
65.2
65.5
66.5
67.4
68.7
69.5
'14
'15
'16
'17
'18
'19
여성 고용률
여성고용률(15-64세)
여성 경참율(15-64세)
54.6
56.8
55.2
57.6
55.8
58.1
56.5
58.9
56.9
59.3
57.4
59.8
'14
'15
'16
'17
'18
'19
청년 고용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40.1
44.4
40.8
45.4
41.4
46.4
42.0
46.9
42.3
47.1
43.1
47.9
'14
'15
'16
'17
'18
'19
•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 비중은 가장 높은 수준, 청년 및 여성 고용률 지속 상승


2019 상반기 노동시장 특징 #2.임금근로시간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은 임금 상승, 대기업은 초과 근로시간 감소 등
근로조건 개선
1~4월 누계 임금 상승률
2018년
588 만원
302 만원
300인 이하
300인 이상
임금격차 21만원 감소
2019년
580 만원
315 만원
300인 이하
300인 이상
3000이상 대비 300인 미만 임금수준
2018년
2019년
51.4%
54.3%
• 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으로 소규모 사업체 임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고무 플라스틱
10.2시간
식료품
9.8시간
음료
9.7시간
1차금속
6.1시간
비금속광물
5.5시간
화학제품
5.5시간
• 주52시간제도 영향으로 장시간 근로가 많은 대기업(제조업)의 초과 근로시간 감소
저임금 노동자 비중
25.5
25.0
24.7
23.8
23.9
24.7
23.7
23.5
23.5
22.3
19.0
'08.6월
'09.6월
'10.6월
'11.6월
'12.6월
'13.6월
'14.6월
'15.6월
16.6월
'17.6월
'18.6월
임금 5분위 비율
5.69
5.40
5.37
5.45
5.33
5.43
5.47
5.41
5.24
5.06
4.67
'08.6월
'09.6월
'10.6월
'11.6월
'12.6월
'13.6월
'14.6월
'15.6월
'16.6월
'17.6월
'18.6월
• 2018년 임금분배 지표 큰폭으로 개선 (임금5분위 배율, 저임금 노동자 비중)


2019 상반기 노동시장 특징 #3.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나며
고용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가입자수
■ 전년동월 대비 증감 ● 고용보험 가입자수
1200만 4천명
1229만 9천명
1239만 2천명
1260만 9천명
1271만 2천명
1290만 1천명
1301만 7천명
1331만 1천명
1353만 4천명
34만6천명
42만명
38만8천명
31만명
32만명
29만2천명
30만5천명
41만1천명
51만7천명
'15상
'15하
'16상
'16하
'17상
'17하
'18상
'18하
'19상
• 2019년 상반기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51만 7천명 증가하여 '07년 상반기 이후 최대 증가폭 기록
산업
제조업 5천명 증가
서비스업 49만 3천명 증가
식료품 1만2천명
의약품 5천명
기타운송장비(조선) 1천명
보건복지 14만2천명
숙박음식 6만8천명
도소매 6만5천명
SALE
• 제조업의 식료품, 의약품과 서비스업의 보건복지, 숙박음식업이 견조한 증가세 지속
규모
30인 미만 27만 4천명
30~99인 4만 3천명
100~299인 4천명
300인 이상 20만 4천명
• 노동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크게 증가
연령
29세 이하 8만 3천명
30대 2만 4천명
40대 2만8천명
50대 18만 5천명
60세 이상 19만 7천명

OECD 통계로 보는 한국의 보건의료

자료 : 보건복지부(2019.7.22.)

❑ 개요

○ [보건복지부, OECD 통계로 보는 한국의 보건의료 발표, 2019.7.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9」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위치·현황 등을 분석, 주로 2017년 기준의 수치를 수록※※

※ 「OECD 보건통계」: 건강 수준,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장기요양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를 담은 데이터베이스(DB)로 회원국의 보건 수준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어 국가별 수준 비교와 각국의 정책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

※ OECD는 국제기구의 공통 지침을 기반으로 작성된 회원국의 통계를 제출받아 해당 자료를 매년 업데이트 해오고 있음.

※※ (유의점) OECD는 2019년 7월 2일에 통계를 공표한 이후, 일부 수정·보완하고 있으므로 자료의 추출 시점에 따라 보도자료의 수치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본 자료는 2019년 7월 5일 기준의 OECD DB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

❑ 주요 내용

〈건강 수준〉

◈ 기대수명이 10년 전과 비교해서 3.5년 증가했지만,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 주요 질환의 사망률은 대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상황
◈ 자살에 의한 사망률도 계속 감소 추세

○ [기대수명※] 2017년 한국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OECD 국가의 평균(80.7년)보다 2년 길었고, 기대수명이 가장 긴 일본(84.2년)과는 1.5년의 차이를 보였으며, 한국의 기대수명은 OECD 국가 중 상위국

○ [주관적 건강인지율]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 하는 경우는 한국(29.5%)이 가장 적었으며, 일본(35.5%)이 그 다음으로 적었고, 반면, 호주(85.2%), 미국(87.9%), 뉴질랜드(88.2%), 캐나다(88.5%) 등 오세아니아와 북미 지역 국가에서는 조사 대상 10명 중 9명이 '본인은 건강하다' 고 응답

※ 주관적 건강상태는 조사방법, 국민의 응답 성향과 사고방식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통계·조사

○ [사망률※] OECD가 산출한 연령표준화사망률※※에 의하면 한국 국민은 암에 의해서 인구 십만 명당 165.2명이, 순환기계 질환에 의해서 147.4명이, 호흡기계 질환에 의해서 75.9명이 사망하였으며, 치매에 의해서도 12.3명이 사망

※ 2017년의 사망률 정보를 질병별로 제공한 국가는 5개에 그쳐, 사망률 지표는 2016년 기준(인근 과거년도)으로 비교

※※ OECD는 회원국 간 연령 구조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OECD 인구로 표준화하여 사망률(Age-standardized death rate)을 산출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발표되는 사망률 통계와 수치가 다를 수 있음.

○ [자살] 2016년 한국의 자살 사망률은 인구 십만 명당 24.6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리투아니아(26.7명) 다음으로 높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영아 사망률] 2017년 한국의 영아 사망률은 출생아 천 명당 2.8명으로 OECD 평균(3.8명)보다 1.0명 낮아

<건강 위험요인>

◈ 2017년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흡연율과 주류소비량이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
◈ 반대로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은 증가 추세

○ [흡연율] 2017년 한국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은 17.5%※로 OECD 평균(16.3%)을 약간 상회

※ 흡연율: (2007) 24.0% → (2012) 21.6% → (2017) 17.5%

- (성별) 남자의 흡연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이나 감소※ 추세

※ 한국의 남자 흡연율: (2007) 43.0% → (2017) 31.6%

○ [주류소비량] 순수 알코올※을 기준으로 측정한 한국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주류소비량은 2017년에 연간 8.71※※로 OECD 평균(8.91) 수준

※ 맥주는 4~5%, 포도주는 11~16%, 독주는 40%의 알코올로 환산

※※ 주류소비량: (2007) 9.3ℓ → (2012) 9.1ℓ → (2017) 8.7ℓ,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

○ [과체중 및 비만] 키와 몸무게의 측정에 의해서 '과체중 및 비만'으로 판명된 15세 이상 국민은 33.7%※로 일본(25.9%)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으며, 남미 지역인 칠레(74.2%)와 멕시코(72.5%)는 국민 10명 중 7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

※ 한국의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 (2007) 31.0% → (2012) 31.8% → (2017) 33.7%

통계·조사

<보건의료자원>

◈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임상 의사,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적 자원**은 **부족**
◈ **병상, 의료장비**(MRI, CT 스캐너) 등 **물적 자원**은 **과다**
◈ **최근 5년간 병원 병상 수 증가**에는 **장기요양 병상 확대**가 **큰 영향**

❍ **[임상 의사]** 2017년 한국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천 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었으며**(OECD 평균: 3.4명), **가장 많이 확보한 국가**는 **오스트리아**(5.2명)와 **노르웨이**(4.7명)

❍ **[간호인력]** 한국의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은 **인구 천 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9.0명)보다 **2.1명 적어**

❍ **[병상 수]** 2017년 병원의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OECD 평균**(4.7개)의 **약 3배** 가까워

❍ **[의료장비]** 2017년 한국의 **자기공명영상(MRI) 보유 대수**는 **인구 백만 명당 29.1대**, **컴퓨터단층촬영기**(CT 스캐너)는 **인구 백만 명 당 38.2대**로 모두 **OECD 평균**을 **상회**

❍ **[외래 진료]** 2017년 한국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이는 **회원국들**의 **평균**(7.1회)보다 **2.3배 높은** 수준

❍ **[평균재원일수]** 2017년 한국 전체 입원 환자의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8.5일**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28.2일) **다음**으로 **길어**(※ OECD 평균: 8.2일)

- 한편, **2017년 한국**의 **급성기 치료 평균재원일수**는 **7.5일**로 **OECD 평균**(6.4일)을 **약간 상회**

❍ **[제왕절개]** 2017년 한국의 제왕절개 건수는 **출생아 천 명당 451.9건**※으로 **OECD 국가 중 터키**(531.4건)에 **이어 많이 실시**(※ OECD 평균: 265.7건)

※ 제왕절개(출생아 천 명당 수술건수): (2007) 353.4건 → (2017) 451.9건

❍ **[경상의료비]** 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경상의료비는 **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7.6%**로 **OECD 평균**(8.8%)에 비교해서 **다소 낮아**

- **(1인당 경상의료비) 2,870.3 US$ PPP**※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6.0%씩 증가**(※ OECD 연평균 증가율: 1.8%)

※ 각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평가환율임(PPP: Purchasing Power Parity)

- **(가계직접부담 비중)** 2007년 36.2%, 2012년 35.0%, **2017년 33.7%**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

통계·조사

❍ [의약품 판매액 및 소비량] 2017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634.0 US$ PPP로, OECD 평균(472.6 US$ PPP) 보다 161.4 US$ PPP 높아

- (국가별) 그리스(751.5), 벨기에(736.2)의 의약품 판매액이 1인당 700 US$ PPP를 넘으면서 한국보다 많아

- (주요 의약품의 소비량) 항우울제가 22.0 DDD/천 명/일(이하 DID※)로 OECD 평균(63.0 DID)의 약 1/3 수준으로 확인된 반면, 항생제는 32.0 DID로 OECD 평균(19.1 DID)의 약 1.7배로 확인

※ DID: Defined daily dosage(DDD) per 1,000 inhabitants per day

〈장기요양〉

◈ 장기요양 수급자(65세 이상 인구 중 8.3%)는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서 적지만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강화에 따라 인력과 시설 등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기반(인프라)이 계속적으로 확충

❍ [장기요양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8.3%로 OECD 평균(12.5%)보다 낮아

※ 유급 장기요양서비스(시설서비스 또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의미함. OECD는 시설과 재가를 구분하여 통계를 수집하고 공표하고 있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두 가지 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국가는 두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수급한 경우에 중복 집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 65세 이상 인구): (2008) 2.8% → (2017) 8.3%

-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에 따라 GDP에서 장기요양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0.3%에서 2017년 0.9%로 증가하였고, GDP 대비 장기요양지출비의 비중이 가장 많은 국가는 노르웨이와 스웨덴(각각 2.9%)으로 집계

❍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2017년 한국의 공식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백 명당 3.6명으로 OECD 평균(5.0명)보다 1.4명 적었으며,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가 많은 국가는 노르웨이(12.7명)와 스웨덴(12.3명)

※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65세 이상 인구 백 명당): (2009) 2.7명 → (2017) 3.6명

❍ [장기요양 병상 및 침상] 65세 이상 인구 천 명당 '요양병원의 병상과 시설의 침상※'은 60.9개※※로 집계

※ 거주형 장기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보유한 장기요양침상을 의미

※※ 장기요양 병상 및 침상(65세 이상 인구 천 명당): (2007) 24.8개 → (2017) 60.9개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